

총 무 처

국무총리지시 제 6 호

(720-2064)

1991. 4. /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91년도 행정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지시

1. 정부는 그동안 행정의 민주화와 경제·사회의 공정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년 들어 우리의 행정 환경은 대내외적인 격동의 전환기를 맞아 그 변화의 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의 각종 행정제도가 환경변화를 미처 수용하지 못한 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상태로 온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각종 법령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2. 이를 위하여 정부는,

첫째,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둘째, 교통·주택·환경·교육 등 국민 기본생활욕구의 충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셋째, 범죄를 퇴치하고 불법을 추방하는 등 법질서 확보와 사회안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넷째, 지방자치제 실시 및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금년도 제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91년도 행정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제도개선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각 부처는 국민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행정기관 상호간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개선이 완료된 과제의 법령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나. 개선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국민에게는 개선취지와 내용을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에게는 세부업무처리지침을 주지시켜 개선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다. 아울러, 각 부처는 이미 확정된 과제 이외에도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제도개선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총무처장관은 각 부처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개선작업을 총괄하면서 수시로 개선된 제도의 이행실태를 확인·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91년도 행정제도개선 추진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10-54), 나(01)

行政制度改善 推進指針

1991. 3.

總 務 處

I. 基本目標 및 改善方向	1
1. 基本目標	1
2. 改善方向	1
II. '91年度 推進計劃	2
1. 課題選定	2
2. 課題推進	3
3. 法令措置 및 弘報	3
4. 事後管理	4
5. 部處別 課題現況	5
III. 行政事項	9
1. 制度改善 作業日程	9
2. 制度改善 課題推進	9
3. 制度改善 推進狀況 報告	10
4. 制度改善과 提案制度와의 連繫	11
5. 制度改善業務 有功者 表彰	11
6. 制度改善作業 推進上の 留意事項	12
IV. '91年度 部處別 行政制度改善 課題	19

I . 基本目標 및 改善方向

1. 基本目標

民主化,自律化,地方化,國際化,情報化 등 '90년대 行政環境의 變化에
대응하여 각종 行政制度를 改善함으로써 公正하고 均衡있는 國家發展 支援

2. 改善方向

- 國民生活에 不便을 주는 制度의 改善
 - 不合理하거나 非現實的인 各種 規制의 整備
 - 國民의 參與擴大 및 住民便益의 增進
- 社會福祉 및 衡平增進을 위한 制度의 改善
 - 交通,住宅,環境,教育 등 國民基本生活欲求의 充足
 - 低所得層 등 脆弱階層에 대한 支援의 強化
- 社會安定을 위한 制度의 改善
 - 犯罪,退治,不法追放 등 法秩序의 確保
 - 不條理要因의 改善 등 社會紀綱의 制度的 確保
- 地方自治制 實施에 對備한 制度의 改善
 - 地自制實施에 따른 國家機能의 地方移管 擴大
 - 地域間 均衡發展을 위한 制度의 整備
- 國際化,情報化에 對應하기 위한 制度의 改善
 -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한 制度의 擴充
 - 急速한 情報化에 對處하는 制度的 裝置의 講究

Ⅱ . '91年度 推進計劃

1. 課題選定

가. 選定對象

— 10.13 特別宣言 및 2.19 特別談話와 연계 추진 —

- 社會安定을 위한 制度改善
· 犯罪와 暴力 退治, 不法과 無秩序 추방, 일하는 風土 조성 등
- 깨끗한 行政을 위한 制度改善
· 行政公開, 參與擴大, 不條理要因의 制度的 改善 등
- 地域間 均衡發展을 위한 制度改善
· 地自制 實施에 따른 國家機能의 地方移管 등
- 國民의 基本生活慾求 充足을 위한 制度改善
· 交通, 住宅, 環境, 教育, 衛生問題 등
- 脆弱階層에 대한 支援制度 改善
· 老人福祉, 障礙者福祉, 國民保健, 醫療保障 등

나. 選定節次

- 輿論調查를 통한 改善候補課題 발굴 : 總務處
· 國民 各界 各層의 다양한 輿論 收斂
- 候補課題에 대한 關係部處 意見照會 실시 : 總務處, 各 部處
· 關係部處間 有機的인 協議, 調整
- 候補課題에 대한 審議, 調整, 確定 : 制度改善委員會
· 斯界 專門家의 意見 收斂

2. 課題推進

- 選定된 課題는 各部處 '91년도 主要業務計劃에 反映, 推進
- 改善案은 各界 專門家, 利害當事者의 광범한 輿論 收斂, 反映
- 改善案 및 關係法令 確定時에는 반드시 制度改善委員會의 審議, 議決을 거쳐 確定
- 一部 移越課題의 早速한 完決 推進
- 課題別 推進狀況(분기별) 管理 徹底(Ⅲ. 행정사항 참조)

3. 法令措置 및 弘報

- 制度改善에 따른 조속한 法令化 措置
 - 各 部處 長官責任下에 當該年度內 推進
 - 法律 改正事項은 '91년도 立法推進計劃(法制處)에 反映 推進 및 臨時國會 최대 활용
- 對國民 弘報 實施
 - 改善된 制度의 早速한 定着을 위한 弘報 強化
 - 各種 報道媒體를 통한 制度改善 弘報의 지속적 實施
 - 官報, 班常會報 등의 적극 活用

4. 事後管理

○ 一線機關에 대한 細部業務處理指針 通報

- 改善案 確定施行과 동시에 一線機關에 指針通報로 執行의 實效性 도모
- 改善된 制度의 趣旨, 改善內容, 業務處理 要領(변경된 書式, 변경된 處理節次) 등 포함

○ 改善制度의 履行實態 指導·點檢 強化

- 各部處 : 自體監査를 통한 연중 지속적인 指導·點檢
- 總務處 : 年2回 履行實態 確認·點檢
 - 確認方法 : 市·道別로 確認班을 편성하여 一線 行政機關의 履行實態 現場點檢
 - 措置計劃
 - 改善制度의 시행상 問題點 및 副作用 파악
 - 未洽하고 補完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補完措置

5. 部處別 課題現況

7. '91年度 部處別 制度改善課題

部處名	課 題 名	課題數
計		135
調 達 廳	○ 海上積荷保險 付保條件 改善 등	3
統 計 廳	○ 韓國標準產業分類制度 改善	1
總 務 處	○ 個人業務便覽의 制度化 등	3
科學技術處	○ 技術用役導入制度 改善	4
環 境 處	○ 環境管理體系의 改善 등	9
公 報 處	○ 社會團體 登錄制度 改善	1
國家報勤處	○ 轉役豫定者 新規 身體檢查 制度改善 등	4
外 務 部	○ 海外移住制度 改善 등	2
內 務 部	○ 消防法違反 過怠料 賦課制度 改善 등	3
財 務 部	○ 身體障礙者에 대한 免稅用物品 證明發給制度 改善 등	3
國 稅 廳	○ 稅金計算書 提出方法의 改善 등	8
關 稅 廳	○ 臨時開廳手數料 納付制度 改善 등	5
法 務 部	○ 修交社會主義國家 國民에 대한 入國節次 簡素化 등	3
國 防 部	○ 軍用施設 郊外移轉推進制度 改善 등	3

部處名	課 題 名	課題數
兵 務 廳	○ 兵籍記錄表 管理制度 改善	1
教 育 部	○ 乳兒教育機關 管理體系의 一元化 등	4
文 化 部	○ 公演場 設置許可要件 強化	1
體育青少年部	○ 學校間 競技大會 運營方法 改善 등	3
農林水產部	○ 糧穀小賣業 許可制度 改善 등	4
農村振興廳	○ 生物學的 製劑 動物藥品의 國家檢定制度 改善	1
山 林 廳	○ 輸出 林山物 檢查制度 改善 등	5
水 產 廳	○ 漁船出入港 申告制度 改善 등	5
商 工 部	○ 創業支援制度 改善 등	5
工業振興廳	○ 에너지節約型 電氣用品 生産 誘導	1
動力資源部	○ 農事用 電氣料金 賦課制度 改善 등	4
建 設 部	○ 移住定着金 支給制度 改善 등	11
保健社會部	○ 醫療機關 開設時 申告制度 改善 등	10
勞 動 部	○ 漁船員에 대한 災害補償制度 改善 등	4
交 通 部	○ 自家用自動車 使用申告制度 改善 등	9
鐵 道 廳	○ 乘車券 返還 및 電話豫約 取消 手數料 變更 등	3
海運港灣廳	○ 海上運送事業 免許制度 改善 등	6
遞 信 部	○ 郵便料金 減額制度 改善 등	6

4. 部處別 改善對象課題 現況

機關名 區分	計	'91年度 課題	'90年度 繼續課題
計	135	100	35
調 達 廳	3	2	1
統 計 廳	1	0	1
總 務 處	3	3	0
科學技術處	4	4	0
環 境 處	9	6	3
公 報 處	1	1	0
國家報動處	4	3	1
外 務 部	2	2	0
內 務 部	3	3	0
財 務 部	3	3	0
國 稅 廳	8	3	5
關 稅 廳	5	5	0
法 務 部	3	2	1
國 防 部	3	3	0

區分 機關名	計	'91年度 課題	'90年度 繼續課題
兵 務 廳	1	1	0
教 育 部	4	2	2
文 化 部	1	0	1
體育青少年部	3	2	1
農林水產部	4	1	3
農村振興廳	1	0	1
山 林 廳	5	5	0
水 產 廳	5	4	1
商 工 部	5	3	2
工業振興廳	1	1	0
動力資源部	4	4	0
建 設 部	11	9	2
保健社會部	10	9	1
勞 動 部	4	1	3
交 通 部	9	6	3
鐵 道 廳	3	2	1
海運港灣廳	6	4	2
遞 信 部	6	6	0

III. 行政事項

1. 制度改善作業 日程

區 分	日 程
○ 改善課題 選定	○ '91. 1 - 3
○ 改善案 確定	○ '91. 3 - 12
. 改善試案 作成	
. 關聯機關 協議	
. 制度改善委員會, 國務會議 上程, 審議, 確定	
○ 關聯法令 整備	○ '91. 3 - 12

2. 制度改善 課題推進

- 改善課題 選定 : '91年度 第1回 制度改善委員會
- 改善案 確定 : 關聯機關 協議, 輿論收斂 및 制度改善委員 意見反映 後 確定
- 制度改善委員會 上程
 - . 上程案件은 國務會議 上程案件에 準하여 作成
 - . 上程案件 90部를 總務處에 提出
 - . 制度改善委員會에서 審議, 確定

○ 國務會議 上程

· 國務會議 上程案件은 各部處에서 準備하되 制度改善委員會 審議結果를 反映하여 上程

○ 各 部處別로 改善案 確定, 施行 및 法令整備 推進

○ 改善(案)을 確定, 施行한 課題는 主要改善內容 및 관련 措置事項을 別添書式 "나"에 의거 作成, 通報

3. 制度改善 推進狀況 報告

가. 對象機關

○ 各 院, 部, 處, 廳

나. 分期別 推進狀況 報告

○ 各 中央行政機關長은 每分期 翌月 7日까지 總務處에 推進狀況 提出

○ 報告事項

· 改善中인 課題

- '91年度 制度改善課題 推進狀況(書式 "가")

· 改善完了된 課題

- 制度改善 完了課題 結果 通報(書式 "나")

· 改善合意하였으나 法令改正이 未完了된 課題

- 法令整備 推進現況(書式 "다")

4. 制度改善과 提案制度와의 連繫

가. 目的

職務提案으로 適用可能한 優秀改善課題를 選定,採擇하여 포상을
實施함으로써 制度改善作業의 活性化 促進

나. 推薦範圍

- 制度改善課題로 推進 實施하여 改善完了된 各 部處 課題 中에서 選定
- 行政能率의 向上, 豫算節減 등 改善效果가 큰 課題는 公務員提案制度에
의한 褒賞 實施

5. 制度改善業務 有功者 表彰

가. 目的

公正,均衡發展을 위한 制度改善에 기여한 공이 큰 有功者들을 表彰함으로써
制度改善業務의 活性化를 기하고, 擔當公務員의 士氣를 昂揚

나. 表彰內容

- 表彰對象者 : 各 中央行政機關 및 市,道 制度改善業務擔當 5級以下 公務員
- 表彰人員 : 10名 이내
- 表彰區分 : 國務總理表彰 2명
總務處長官表彰 8명

6. 制度改善作業推進上の留意事項

가. 改善作業의 慎重한 마무리

- 有關機關間 충분한 協議, 調整을 거쳐 改善作業 推進
- 關聯機關은 制度改善案을 迅速하고 誠實하게 協議, 調整
- 各界 專門家 등의 폭넓은 參與를 誘導하고 充分한 研究, 檢討를 거쳐 慎重하게 改善案 確定

나. 改善作業의 管理徹底

- 課題別로 "카드화" 또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改善作業의 效率的 管理

※ "카드" 書式은 既存書式에 依함.

데이터의 書式 또한 既存 "카드"의 書式과 同一

- 定期的으로 推進狀況 自體點檢, 確認 實施

< 서 식 가 >

제 도 개 선 과 제 추 진 상 황

과 제 명 :

(주관부서 : 국 과)

(완료예정 : '91. . .)

개 선 방 향	세 부 추 진 일 정

분 기 중 추 진 실 적	부 진 사 유 및 대 책

※ (작성요령 : 뒷면참조)

< 작성요령 >

1. 개선방향 : 주요개선방향을 항목별로 약술
2. 세부추진일정 : 단계별 세부추진일정(입안.관련기관협의.제도개선위원회
상정, 국무회의 상정 등)을 기입
3. 분기 중 추진실적 : 분기 중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기재
4. 부진사유 및 대책 :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재 (특히 '91년도 중 또는
'92년도 까지 추진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사유 및
과제대체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

< 서 식 나 >

제도개선완료과제 결과통보

과 제 명 :

(주관부서 :

국

과)

< 개선목적 >

< 개선내용 >

< 법령정비사항 >

< 추진상황 >

※ (작성요령 : 뒷면참조)

< 작성요령 >

1. 서식 작성목적 : 정부의 행정제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처별 개선완료
과제의 주요개선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국민·관련기관 및 단체와
일선행정기관에 홍보하여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시행되도록
하기 위함.
2. 서식 작성방법 : '91년도 각 부처별 추진과제중 개선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
추진상황을 개조식으로 작성
 - 개선목적 : 과제의 선정배경·개선에 따른 대국민 파급효과등을 중심으로 기술
 - 개선내용 : 주요개선내용을 항목별로 현행제도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 법령정비사항 : 개선내용 시행을 위해 정비한 법령 개·폐사항의 내용 및
조항을 명확히 기재 (예: ○○법 제○조 제○항 개정)
 - 추진상황 : 개선시안 확정, 관계부처협의,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청취,
차관회의·국무회의상정, 관계법령개정 등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재

< 서식 다 >

법령 정비 추진 현황

과 제 명 : (년도과제) (주관부서 : 국 과)

(완료예정 : '91. . .)

법령명	개정요지	추진 일정					추진 상황	
		입안	협의	국무회의	국회	시행	실적	일자

부진 사유 및 대책

※ (작성요령 : 뒷면참조)

< 작성요령 >

1. 법령명 : 법률, 대통령령, 부령, 기타의 순으로 작성(조항을 명확히 표시)
2. 개정요지 : 개선안을 항목별로 작성하되 추진상황이 다를 경우 항목을 분리 기재
3. 추진일정 : 법령정비작업의 완결계획을 분기별로 기재
4. 추진상황 : 입안, 관계부처협의, 당정협의, 법제처제출 및 심의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통과, 대통령결재, 국회상정.통과, 공포, 시행등을 일지와 함께 기입

Ⅳ . '91年度 部處別 行政制度改善 課題

부처별 목차

1. 조 달 청	-----	23
2. 통 계 청	-----	26
3. 총 무 처	-----	27
4. 과학기술처	-----	30
5. 환 경 처	-----	34
6. 공 보 처	-----	43
7. 국가보훈처	-----	44
8. 외 무 부	-----	48
9. 내 무 부	-----	51
10. 재 무 부	-----	54
11. 국 세 청	-----	57
12. 관 세 청	-----	65
13. 법 무 부	-----	70
14. 국 방 부	-----	73

15. 병 무 청	76
16. 교 육 부	77
17. 문 화 부	82
18. 체육청소년부	83
19. 농림수산부	86
20. 농촌진흥청	90
21. 산 림 청	91
22. 수 산 청	96
23. 상 공 부	101
24. 공업진흥청	106
25. 동력자원부	107
26. 건 설 부	112
27. 보건사회부	123
28. 노 동 부	134
29. 교 통 부	140
30. 철 도 청	150
31. 해운항만청	154
32. 체 신 부	160

1. 해상적하보험 부보 조건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재무부장관 지시('69.7.25)에 의거,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협정 체결
 - 외자구매시 구매자금이 KFX자금일 경우 예외없이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부보
 - 차관 자금의 경우에는 구매요청기관이 보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부보

<문제점>

- 대한손해보험협회의 기본보험요율이 군수물자 및 차관계약물자에 비해 2배 이상 고율이며, 전 위험담보(AIR)의 경우에도 물자에 따라 파손, 환적, 내륙운송등에 대한 추가부보 없이는 이에따른 사고보상이 불가능함.
- 따라서 일부 구매요청기관에서는 CIF조건 계약을 선호함으로써 국내 보험 산업지원 및 외화절약 정책에 역행하고 있음.

2. 개 선 방 향

- KFX자금 구매물자 및 구매요청기관이 보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차관자금 구매물자 경우에도, 군수물자, 차관자금 보험계약과 동일한 요율과 조건으로 구매추진
- 동 개선방안에 의할 경우 연간 약 2억4천만원 정도, 국고절감효과 기대

3. 관 계 법 령

- 보험업법 제 17 조 (상호협정)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 14 조 (상호협정인가신청)

4. 관 련 부 처

- 재무부
- 대한손해보험협회

[조 달 청]

2. 년 간 구 매 예 시 제 도 개 선

1. 현 황 및 문 제 점

< 현 황 >

- 조달물품의 적정한 시기 공급을 위하여 조달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예시를 통해 관련업체의 기획생산과 기술개발유도
- 매년초 각급수요기관의 구매계획을 받아 수요기관별 품명(공사명), 수량, 규격, 발주시기등을 예시함. (발간배포)

< 문 제 점 >

- 각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이 행정상황변화에 따라 당초 예시한 구매계획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있음. (정확성 약 60%정도)
- 위와같이 부정확한 구매예시가 관련업체로 하여금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 있음.

2. 개 선 방 향

- 각 수요기관이 충실한 구매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 연구(직접방문등)
- 행정수요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구매행정소요일수 단축 유도
- 정확한 구매계획 자료수집 및 예시

3. 관 계 법 령

- 조달청내자처무규정 제 6 조의 2
- 조달청 시설공사계약 및 감리업무처리규정 제 4 조
- 물품관리법 제 17 조

4. 관 련 부 처

- 없 음.

3. 정부물품분류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현재 정부물품분류제도는 정부가 보유, 사용하는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식별, 물품분류번호 부여
- 분류방법
 - 군급, 품명, 규격순으로 분류
 - 하나의 규격에 하나의 정부물품번호 부여
 - 품명 및 규격분류는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
- 분류주체 : 군급 및 품명분류는 조달청장, 규격분류는 각안의 관서장(조달청장 협의)

<문제점>

- 품명 또는 규격의 분류기준이 미비
- 물품관리상 정보제공 기능이 미약
- 미분류 물품의 취득·보유물품을 조달청에 요청이 없을시 분류가 불가능
- 다원화된 물품분류체계 운영으로 사용상 혼란과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

2. 개선 방향

- 미연방 목록제도를 도입, 국가물품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목록체계의 표준화를 이룩하며
- 국제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물품정보의 이용체계 구축
 - DB구축 및 시스템 분석
- 행정전산망과 연계추진

3. 관계 법령

- 물품관리법 제 5 조, 동법시행령 제 3,4 조, 동법시행규칙 제 5,6 조

4. 관련 부처

- 재무부, 국방부, 총무처

1. 한국표준산업분류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통계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통계자료의 국내·외 상호비교성과 시계열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1963년에 제정하여 각급 통계작성기관에서 활용해 오고 있음.
- 동산업분류는 1968년에 개정된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Rev, 2)의 체계를 원칙으로 따르고 5자리이하 분류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 5차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1984.1.26개정한 이래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음.

<문제점>

- 동산업분류는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2. 개선 방향

- 제 3차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 권고안이 접수되는 즉시 구체적인 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계획을 수립·추진하여 1991년도에 제 6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고시

3. 관계 법령

- 통계법 제 11 조
- 경제기획원 고시 71 호

4. 관련 부처

- 경제기획원

1. 개인업무편람의 제도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개인업무 체계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담당자 교체시 담당업무의 내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의 인계인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문제점>

- 개인담당업무의 편람화 미흡으로 담당자의 교체 또는 부재시 업무공백 발생
- 사무처리의 객관적·통일적 기준 확립의 필요성 대두

2. 개선 방향

- 개인업무편람 작성의 제도화
 - 작성대상 : 5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하의 전 공무원
 - 작성내용
 - － 담당업무의 관련법규 및 처리기준
 - － 업무연혁 및 단위업무별 현황
 - － 업무추진방법, 업무처리흐름도 및 기타 참고자료 등
 - 유지관리
 - － 상급자의 정기검사 및 결재로 공식문서화
 - － 담당자 교체시 인계인수대상으로 지정
 - － 신규채용자 및 전보자 필독의무화

3. 관계 법령

- 『사무관리규정』 제정으로 제도화

4. 관련 부처

- 전 행정기관

[총 무 처]

2. 6 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정년현황

- 5 급이상 : 61 세 (기술직은 3 년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6 급이하 : 58 세

<문제점>

○ 고령화 사회도래에 따른 대책 수립 필요성 대두

- 국민평균수명연장 : ('60 년) 53 세 → ('70 년) 63 세 → ('80) 66 세 → ('90) 70 세

- 풍부한 실무경력과 기능을 갖춘 숙련된 인력의 계속 활용 미흡
- 생애주기 (Life cycle) 와 가계지출과의 연계 미흡

2. 개 선 방 향

○ 6 급이하 공무원 정년의 3 년범위내 개별연장제 도입

- 기본정년은 58 세로 두고, 기관의 인력운영 사정 및 신체 · 활동능력을 감안하여 61 세까지 연장

3. 관 계 법 령

- 국가공무원법 개정
- 공무원임용령 개정

4. 관 련 부 처

- 전부처

3. 가 점 평 정 제 도 개 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포상자·특수지근무자·자격증 소지자에게 공무원승진평정에 있어서 4.5 점까지 가점부여
 - 포상(훈·포장~장관) : 0.5~2.0 점
 - 민원실·교육원·특수지근무자 : 2.5 점
 - 직무관련자격증소지자(타자, 기술자격증): 0.3~1.0 점

최고 4.5 점까지
가점

<문제점>

- 가점의 승진영향 과다로 실적주의 인사원칙 저해
 - 최근의 인사정체로 가점의 승진영향력 상대적 증가
- 공무원 상호간의 갈등조장, 인사불만등 조직활성화 저해
 - 업무간 균형발전저해 및 가점부서 전보경쟁심화등 인사질서 문란
 - 격무부서 근무기피, 가점대상부서 근무선호
 - 대다수 비가점 재직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

2. 개 선 방 향

- 가점승진 기여도와 실적주의 인사원칙의 상호 조화
 - 가점의 축소조정 검토
 - 격무부서의 가점제 실시등 가점대상분야의 합리적 조정 재검토

3. 관 계 법 령

- 공무원평정규칙 개정

4. 관 련 부 처

- 전부처

[과 기 처]

1.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기술료 사용비율(%)

	참여연구 인센티브	연구개발 재 투 자	기초과학 연구기금	기타연구 인센티브
정 부 출 연(연)	30	30	30	10
대학, 국·공립(연)	30	-	70	-
기 업 부 설(연)	20	-	80	-

<문제점>

- 제반 여건변화에 따른 사용비율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대두
 - 연구개발사업이 대형화 추세에 따른 사용부문간 형평 고려
 - 기초과학연구 기금의 확대 조성에 따른 조정
 - 기타 지적소유권 수요급증에 따른 특허료의 자체조달 재원확보 등

2. 개 선 방 향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료 사용비율의 조정 추진
-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료 사용 범위 검토

3. 관 계 법 령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 31 조 내지 제 34 조

4. 관 련 부 처

- 없 음.

2.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체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최근 과학기술이 경제·산업·국방·문화등 전분야에 걸쳐 핵심요소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됨에 따라, 정부 각부처에서는 관련분야의 기술개발 뿐만아니라 인력개발·기술협력사업등을 다양하게 추진하는등 과학기술 관련 행정수요와 투자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문제점>

-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개별적인 법령·제도에 의거 추진 됨에 따라 국가전체의 유기적인 연계의 미흡으로 한정된 자원의 목표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상의 문제점 상존

2. 개선 방향

<국가전체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성 확보>

- 국민적 차원 → 『과학기술진흥회의』의 정례화로 국민의견수렴의 장 마련
- 통치권적 차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상설기구화하여 대통령의 과학 기술진흥정책의지의 표상과 정책자문기능의 강화
- 내각차원 →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개편하고 활성화하여 국가전체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심의·조정
 -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연구개발담당관』을 지정하여 상호연계 및 상시 협력체제 구축

3. 관계 법령

- 과학기술진흥법 제4조·5조 등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4. 관 련 부 처

-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내무부, 동자부 등

[과 기 처]

3. 기술용역도입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할 수 있음.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과학기술처장관은 국내용역업자에 의한 수행능력, 용역의 내용과 제공방법의 타당성, 용역대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있고,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문제점>

- 국내 기술용역업체의 경험과 기술축적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용역도입을 지연시켜 사업추진의 적시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2. 개선 방향

- 기술용역도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기술용역도입지원
- 『승인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

3. 관계 법령

-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5항

4. 관련 부처

-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 등 다수부처

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업무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정부는 기업의 자체기술개발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해 조세, 정부재정, 연구요원 병역특례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 이들 정부지원시책중 일부는 과학기술처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신고를 하고 인정을 받은 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처는 사실확인을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 하고, 인정된 연구소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문제점>

-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 큰 폭으로 증가됨에 비례하여 관련 업무량이 증대 됨에도 행정력이 보강이 뒷받침 되지 못함으로써
 -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저하, 사후관리의 부실화등이 우려됨.

2. 개 선 방 향

- 민간자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력의 절감
-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관리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위탁

3. 관 계 법 령

- 기술개발촉진법 제 16 조, 동법시행령 제 19 조, 동법시행규칙 제 9 조

4. 관 련 부 처

- 해당없음.

[환 경 처]

1. 환경 관리 체계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허가권 : 환경보전법시행령 제 16 조 및 제 49 조에 의거 관할업소 구분
- 지도단속권 : 환경보전법 제 24 조 및 훈령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할업소 구분하여 지도·단속
- 행정처분권 :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

<문제점>

- 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권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일선 행정처리업무가
복잡하고 비능률적임.
- 행정처분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민원인에 불편초래

2. 개 선 방 향

- 허가권, 지도·단속권, 행정처분권의 일원화
 - 지방환경청 관할 : 공단내 사업장, 특정유해물질배출사업장, 분진다량 배출
업소 (시멘트·철강산업) 및 공동방지사설 설치 사업장
 - 시·도 관할 : 지방환경청 관할외 사업장

3. 관 계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 55 조 및 동시행령 제 33 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 56 조 및 동시행령 제 12 조제 1 항
- 수질환경보전법 제 55 조 및 동시행령 제 33 조 (별표 7)

4. 관 련 부 처

- 내무부 (시·도)

2.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배출부과금 부과시기

- 자진신고 : 당해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초로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판명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지도·점검 : 개선명령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개선계획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문제점>

- 오염물질이 실제 배출되지 않은 기간까지 산입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기간중 여건변동(휴업등)으로 개선완료후 추징, 환급등의 부과금 조정문제 발생

2. 개선 방향

- 배출된 일수에 대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부과
- 현재의 배출부과금고지서 발급시기를 개선완료 보고되고 5일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예정

3. 관계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 19 조 및 동시행령 제 10 조
- 수질환경보전법 제 19 조 및 동시행령 제 10 조

4. 관련 부처

- 내무부(시·도)

3.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특별청소지역내 건축연면적 1,600㎡이상의 시설물 : 오수정화시설 설치

<문제점>

- 특별청소지역이외의 지역의 경우 → 기준이상 시설물 설치시 제재규정 없음.
 - 휴게소, 대형식당 등 관광지에 대형건축물 신축 성행

2. 개 선 방 향

- 대형시설물 (1,600㎡) 이상에 대하여는 특별청소구역지정과 관계없이 오수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 상수도보호구역, 청정지역은 모든 시설물, 오수정화시설 의무화 규정 신설

3.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 15 조 및 동시행령 제 4 조

4. 관 련 부 처

- 내무부

4. 농촌의 생활쓰레기 관리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발생량

단위 : 톤 / 일

계	연 탄 재	페 비 닐	음 식 물 류	유 리 금 속 등
13,958 (100 %)	7,734 (55.4)	236 (1.7)	5,458 (39.1)	530 (3.8)

○ 처리실태

- 퇴비 및 가축사료화 40 %, 재활용 2 %, 매립·소각등 58 %

<문제점>

○ 배출되는 쓰레기의 성상이 도시와 유사

- 1인당 1일 1.5 kg 배출

○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결여로 쓰레기를 주변 하천등에 투기·방치

○ 영농방식의 전환에 따른 폐비닐·농약빈병 다량 발생

2. 개 선 방 향

- 특별청소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의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지고 처리토록 제도개선

3.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4. 관 련 부 처

- 내무부

5. 배출시설설치 허가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도는 시설 설치전에 사전허가를 받고 시설설치 완료후 15일 이내에 완료 신고후 정상 조업토록 되어 있음.

<문제점>

- 배출시설은 사전허가인 관제로 시설설치 허가만을 받은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의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수반됨.

2. 개선 방향

- 사전허가를 조건부 허가로 대처
 - 배출시설 설치허가후 1년 이내에 완료신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허가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토록하여 1년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2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4. 관련 부처

- 시·도지사

6. 환 경 관 리 체 계 의 발 전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환경보전협회는 회원에 대한 권익옹호나 공동이익 보다는 환경보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단체로서 현재 총 가입대상업체중 10%정도 참여
- 환경보전법상에 환경보전협회의 설립근거 및 기능을 규정
 - * 환경보전협의회 기능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제몽사업등 실시

<문제점>

- 대상업체가 회원에 가입하더라도 별다른 혜택이 없어 참여율 저조
- 환경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 주도 보다 민간단체 중심의 추진이 효율적이며 규제적인 통제보다 홍보·제도 등 예방기능 강화가 바람직함.
- 현재는 민간주도 체제의 환경보전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미약으로 효율적인 환경보전 사업추진에 지장

2. 개 선 방 향

- 환경관리기사의 보수 교육을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
- 환경보전협회의 기능 활성화로 효율적 환경보전 사업 추진 도모
 -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득자중 1,2,3종 업소는 의무 가입

3. 관 계 법 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 38조
- 국가기술자격법 제 16조제 2항, 동법시행령 제 36조제 5항

4. 관 련 부 처

- 노동부

7. 대기분야 배출시설의 범위축소 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현행 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 가스·입자상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중 일부 배출시설의 규정이 광범위하여 배출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예)

별표 2. 1. 라. (2) 1일 원료사용량 0.3톤이상의 석유화학제품의 제조·가공 시설중 폴리에틸렌 수지 또는 폴리프로필렌 수지 등의 제품을 단순가공하기 위해 압출 성형하는 경우 P.V.C의 경우와는 달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거의 없거나 극히 미약하여 방지시설 면제승인대상이 됨.

<문제점>

(예)에서와 같이 오염물질이 거의 없거나 극히 미약하여 방지시설 면제대상이 되는 시설은 현재 기술감리를 통해 해당 배출업소에서 배출시설 사안별로 면제승인을 받음으로써 타업체의 동종, 동규모의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면제승인 신청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인력, 시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2. 개 선 방 향

- 방지시설 면제시설중 (예)등에서와 같이 제품의 제조시설이 아닌 단순 가공 시설중 오염물질 발생이 극히 미미하거나 이미 방지시설 설치면제 승인이 난 시설과 같은 규모나 종류의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 개정시 시행규칙 <별표 2>를 개정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코저 함.

3. 관 계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91.2.2시행)

4. 관 련 부 처

- 내부부 (시·도)

8.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환경보전법 제 9 장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시·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조정실적은 없음.

< 문제점 >

- 현행 환경보전법상 피해구제 제도는 단순한 조정에만 국한되어 있어 분쟁의 조기해결 방안과, 상대적으로 전문지식 등이 약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결여

2. 개 선 방 향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새로이 제정, 중앙과 지방(시·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어 분쟁조정을 독립적으로 전담케 하고, 종전의 단일 조정제도를 알선, 조정, 재정의 3 단계로 구분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토록 개선하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관을 두어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 제도 확립

3. 관 계 법 령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4. 관 련 부 처

- 내무부(시·도)

9. 자동차소음최초검사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현행 자동차소음최초검사는 자동차 제작시에 매차종마다 받게 되어 있음.
- 기본차종에서 변경된 동일차종이라도 소음최초검사 생략신청에 의해 생략 승인 여부를 검토·통보하고 있음.

<문제점>

- 소음최초검사 생략신청 건수의 급증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작성 및 검토로 민원인(자동차회사) 불편 초래 및 행정능률 저하

2. 개선 방향

- 현행 자동차소음최초검사 생략승인 신청을 소음최초검사 생략신고로 개선
 - 생략신고 검토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행위를 종결
- 자율생략신고를 인정하되, 후속조치로 수시검사 강화

3. 관계 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4. 관련 부처

- 없음.

1. 사회단체 등록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사회단체를 조직한 자는 단체를 조직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등록
- 등록청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상요건의 불비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문제점>

- 사회단체(등록·미등록)의 활동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곤란
- 등록을 공신력 획득으로 악용하는 사례 빈번
- 사회단체를 규율·통제하는 것은 민주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음.

2. 개 선 방 향

-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신고제로의 전환이나 등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3. 관 계 법 령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
- 동법시행령 제2조

4. 관 련 부 처

- 전 부처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등의 심의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의 심사결정은 관계부처로 부터 송부된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사실확인서와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에서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확인서 및 등록신청서를 근거로 심의하여 관할(지)청에 결과를 통보하면 관할(지)청장이 대상 여부를 결정

<문제점>

- 국가유공자 요건사실만을 심사하는 등록신청서의 심사(전공사상자, 공사상자 등)는 호적등 공부에 의하여 본인 및 그 유가족 관계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심의회부로 행정력낭비, 관련서류 이송등에 따른 예산낭비, 보훈대상결정지연으로 대상자 불편 초래

2. 개 선 방 향

- 국가유공자 요건사실을 별도심의하는 대상(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등록신청서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일선 지(청)장이 심의 결정
- 사실상 법적용대상자(예:사실상 배우자)등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서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3. 관 계 법 령

-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

4. 관 련 부 처

- 없음.

2. 상이군경 등록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등록일부터 보상을 실시하므로 상이자의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상이분류 신체검사전에 등록신청서 접수
- * 구비서류 : 호적등본 1 통, 주민등록등본 1 통, 사진 1 매, 내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심사절차 통지서 1 통

<문제점>

- 기전역한 상이자로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중 신체검사결과 많은 대상자가 등외판정되어 등록신청서류 기각
- * 등외판정 - 89 년도 : 891 건

2. 개선 방향

- 등록신청서 접수시에 구비서류 간소화 (상이등급판정된 자에 한하여 추후 징구) 로 등외판정자의 불만해소

3.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 조제 1 항

4. 관련 부처

- 없음

[국가보훈처]

3. 전역예정자 신규 신체검사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군병원에서 전역심사를 위한 신체검사이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 및 호수를 명시, 통보
- 등록신청과 요건사실을 심사한 후 다시 동일 군병원에서 이중으로 신체검사 실시

<문제점>

- 동일 군병원에서 동일 기준에 의거 이중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불편초래 및 행정력 낭비
 - 신체검사를 위한 이동곤란 및 경제력 손실
 - 등록신청후 대상자 결정시까지 장기간 소요

2. 개 선 방 향

- 전역예정자의 신규 신체검사는 전역심사시에 군병원장이 상이등급을 판정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사실확인서에 신체검사표를 첨부하여 통보
- 상이내용과 판정결과가 현저하게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청장이나 지청장이 직권으로 재심조치

3. 관 계 법 령

-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 조, 제 13 조, 제 15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4. 유족부모 노령부가연금 지급연령 인하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유족부모 노령부가연금 지급대상 : 70세 이상

<문제점>

- 상이군경 및 미망인 노령부가연금 지급연령이 60세 인데 유족부모만 지급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되어있어 대상자간 시혜 형평문제 대두

2. 개선 방향

- 유족부모 노령부가연금 지급연령 인하
 - 65세 이상으로 지급범위 확대조정

3.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23 조

4. 관련 부처

- 경제기획원

[외 무 부]

1 . 법 인 설 립 허 가 제 도 개 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외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초심제도를 설치운용하고 이를 통과한 허가신청서에 대해 장관의 최종심으로 허가여부를 확정하도록 규정

<문제점>

- 타부처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은 초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외무부규칙에서만 동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규 간소화 및 행정규제완화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2. 개 선 방 향

- 상기 규칙이 규정한 초심제도를 규칙문안에서 삭제하고 초심제도는 실제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실무담당차원에서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함.

3. 관 계 법 령

- 외무부소관비영리법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 4 조제 5 항

4. 관 련 부 처

- 교육부, 문화부, 공보처

2 . 해 외 이 주 제 도 개 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해외이주 관계법령에 따라 외무부(해외이주과)에서 이주 적격심사 결정
- 해외개발공사 및 4개 민간 해외이주 알선업체가 수속 대행
 - 연고초청의 경우
 - 수속 서류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원진술서, 입국사증발급 보증 서류
 - 대행 수수료 : 4인 가족 기준 약 15만원
 - 사업이주의 경우
 - 수속 서류 :
 - 1) 이주알선업체의 모집 알선 승인 : 국외협약서, 모집계약서, 국외알선료 내역서, 국내알선료 내역서
 - 2) 해외이주적격결정 및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원진술서, 입국사증 투자사업비 지급 승인 발급 보증 서류, 사업계획서(국·영문), 이력서
 - 대행 수수료 : 국내알선료 세대당 40만원 - 50만원
국외알선료 세대당 4천5백불 - 6천불
수속알선료 4인가족 기준 세대당 15만원

<문제점>

- 해외이주 적격결정(허가)제도로 과도한 민원서류 요구 및 부조리 발생 소지 상존
- 외국 이주알선업체의 아국 접근 어려움으로 해외이주 시장 제약
- 해외이주를 위한 알선료 및 수수료 부담으로 해외이주경비 과다

2. 개 선 방 향

- 해외이주법령 정비
 - 해외이주 업무중 routine 한 연고초청 이주와 50 만불 이하 소액 사업이주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200 만불 이상 고액 사업이주에 대해서만 허가처리
 - 이주 알선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제도 신설 등
- 해외이주과와 국제협력단내 해외이주업무 정비
- 이주수속제도 개선

3. 관 계 법 령

- 해외이주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4. 관 련 부 처

- 없음

1. 소형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근로자가 13명 이하 소형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면세

<문제점>

- 근로자가 아닌 영세서민이 13명 이하 소형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면제혜택이 없음.

2. 개 선 방 향

- 근로자가 아닌 영세서민들이 13명 이하 소형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도 면제혜택 부여

3. 관 계 법 령

- 주택건설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4. 관 련 부 처

- 없음

[내 무 부]

2. 소방법위반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소방법위반 과태료 귀속현황
 - 서울·부산 지역
 - 소방서 미설치 시·군
 - 상기이외 지역
- 당해 지방자치단체 세입
- 국가세입

<문제점>

- 서울·부산지역과 같은 여건에 있는 타지방시, 시·군등에 있어 소방법 위반 과태료를 지방세입이 아닌 국가세입으로 함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

2. 개 선 방 향

- 서울·부산지역과 같은 타지방시, 시·군등의 경우에도 소방법위반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토록 개선

3. 관 계 법 령

-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4. 관 련 부 처

- 없음

3.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자의 합리적 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현재 시내버스운전자, 환경미화요원 등 총 26종 업무종사자를 자체교육 인정자로 지정하고 있음.

<문제점>

- 자체교육인정자의 불합리한 지정운영
(예) 시내버스운전자, 환경미화요원은 자체교육이 인정되나 시외버스·청소차량 운전자 등은 소집교육 대상임.
- 자체교육인정자에 대한 교육·지도감독 미흡

2. 개 선 방 향

- 자체교육인정자의 합리적 지정
 - 시외버스운전자와 청소차량운전자 등을 자체교육 인정자로 지정하는 문제검토
- 자체교육인정자에 대한 교육·지도감독 강화
 - 자체교육계획서 제출의무화, 자체교육시 공무원 임석확인등

3. 관 계 법 령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 33 조제 1 항

4. 관 련 부 처

- 교통부

1. 납세완납증명신청서 서식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 1 조의 납세완납증명신청서 서식중 (1)번란에 “증명서제출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음.

<문제점>

- 사업자(특히, 건설업자)가 정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 발주기관이 많고 계약내용이 빈번한 사업자는 제출처별로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인적·시간적·경제적손실 및 행정력 낭비 초래

2. 개 선 방 향

- 제출처에 따라 증명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제출처란을 삭제하더라도 타목적에 오용될 소지가 없으므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납세완납증명신청서 서식에서 제출처란을 삭제

3. 관 계 법 령

- 국세징수법 제 6 조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 1 조

4. 관 련 부 처

- 국세청

2. 신체장애자에 대한 면세용 물품증명발급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신체장애자가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자동차(1500CC이하)를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 지방거주 장애자의 경우,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증명서를 교부 받으므로 시간적·경제적 불편 초래

2. 개 선 방 향

- 면세용 물품증명서 발급사무를 보건사회부장관 → 시·도지사에게 위임 하여 발급

3. 관 계 법 령

-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4. 관 련 부 처

- 보건사회부

3 . 감 사 결 과 보 고 의 완 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투자기관의 감사가 매년 3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

<문제점>

- 보고횟수의 과다로 능률성 및 자율성 저하

2. 개 선 방 향

- 연 3회의 보고를 연 1회로 간소화

3. 관 계 법 령

- 정부투자기관 감사직무규정 제 18 조 (감사결과보고)

4. 관 련 부 처

- 주무부처 및 투자기관

1. 세금계산서 제출방법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對 白 〉

- 원칙 :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건별로 고액 (30 만원 이상) 과 소액 (60 만원 미만) 으로 구분 집계 · 편철하여 제출.
- 예외 : 세금계산서를 전산처리하여 테이프 또는 일람표로 제출

〈문제점〉

- 전별 제출로 신고불편 과다 및 편철·송보·전산입력 보관등에 행정부담 과중
- 전산제출 방법이 대기업에 적합한 테이프와 일람표만 되어있어 중·소 기업의 전산 이용에 애로

2. 개 선 방 향

- 매입, 매출처별 거래명세표
 - 전산디스켓
- 으로도 제출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

3.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6 조

4. 관련 부처

- 재무부

2. 계약금액 변경시 인지세 납부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공사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의 인지세 납부에 있어서 변경계약서의 기재방법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짐

<문제점>

- 당초 계약금액을 변경시 동일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재방법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 발생

2. 개 선 방 향

- 기재방법에 따른 세 부담차이 해소 → 법령개정 사항
- 세법개정시 반영토록 재무부와 협의

3. 관 계 법 령

- 인지세법 제 1 조
- 인지세법 기본통칙 1 - 4 - 5 1

4. 관 련 부 처

- 재 무 부

3. 전 화 세 제 도 폐 지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전화가입자에게 전화요금의 10%의 전화세 부과
- 전화가 1천3백만 회선을 돌파하면서 농어촌 도서벽지까지 보급됨에 따라 전화세의 부담계층이 과거 고소득층에서 현재는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층까지 확대됨.

<문제점>

- 전화 보급률이 낮았을 때 부유층을 대상으로 특별소비세 성격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전화세는 현재 특별소비세의 성격을 상실하였음.
- '73년 전화세 신설 당시에는 전화가 사치품으로 인식됐지만 한가구 한대꼴 이상으로 전화가 보급된 현재는 생활필수품화하여 조세징수보다는 사용료징수가 바람직함.

2. 개 선 방 향

- 전화세의 폐지 또는 세율의 인하
 - 법령 개·폐 사항
- 재무부에 검토 건의

3. 관 계 법 령

- 전화세법 제3조

4. 관 련 부 처

- 재 무 부

4. 자납세금의 계좌이체 납세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신고납부시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납부는 은행에 불입

<문제점>

- 세금납부를 위해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야되는 불편 발생

2. 개 선 방 향

- 납세자가 거래은행과 사전 자동이체 계약(고지분 세금)
 -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부
 - 납세자가 거래은행에 납부할 세금의 이체요구
 - 은행이 납세자의 거래구좌에서 국고로 자동이체
- 자동이체 납세자는 국세청의 이체요구 지시서에 의하여 납부 가능토록 단서 규정 신설

3. 관 계 법 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18 조

4. 관 련 부 처

- 재 무 부

5. 미과세증명 제출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아파트 분양 임대 신청시에 미과세증명서를 신청자 전부에 받고 있음

<문제점>

- 당첨자 외에도 미과세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력에 낭비가 많음

2. 개 선 방 향

- 국민주택 기금등으로 신축한 소형 아파트 공급신청시 받는 미과세증명을 당첨자에 한하여 받도록 제도개선하여 낙첨자 해당분 증명의 제출 생략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증명발급을 감축하여 행정능률 제고

3. 관 계 법 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1 조

4. 관 련 부 처

- 건 설 부

6.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법 제 16 조)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의 교부
- 교부시기 위반시의 제재 (법 제 17 조, 제 22 조)
 - 교부자 : 미교부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 수취자 :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가액의 10 %)

<문제점>

- 수취자의 매입세액 불공제로 수취자가 지연교부의 책임이 있는 교부자보다 더큰 불이익을 받는것은 불합리함
- 법상 교부시기가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달라 납세자가 불편

2. 개선 방향

-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재화용역을 공급한월의 익월 10일 이내로 함으로서 납세자의 불만 해소 및 납세자의 편의 도모
- 매입세액 공제 허용 : 교부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단 가산세 부과)

3.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 16 조 및 제 17 조, 제 22 조

4. 관련 부처

- 재 무 부

7. 세 무 사 찰 제 도 의 개 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사찰사무 운영규정이 국세청 훈령 제 22 호로 제정되어 조세법칙 사전 조사 사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기하고 있음

<문제점>

- 조세법칙에 대한 공정한 처리기준과 조사절차의 합리성이 미비하여 조세법칙 조사의 객관화가 요구됨

2. 개 선 방 향

- 사찰사무 운영규정의 개선 (조세법칙 조사운영 규정 제정)
 - 조세법칙에 대한 공정한 처리기준 마련
 - － 죄질, 포탈금액, 조사목적등에 따라 객관화
 - － 일반조사 진행중 조세법칙 조사로의 전환기준 마련
 - 조세법칙 조사절차의 합리성 확보
 - － 조세법칙조사 사무관할의 조정
 - － 조세법칙 조사 집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 조세법칙 조사의 엄정한 통제관리
 - － 임의제시에 의한 영치조사 통제장치
 - “세무사찰”이라는 용어의 순화
- 조세법칙조사 전담기구 설치 및 조세법조사 전문요원 확보

3. 관 계 법 령

- 사찰사무 운영 규정

4. 관 련 부 처

- 없음

8. 소득세 납세필증명서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납세자의 급여액, 세액, 납부년월일등을 확인받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경우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함

< 문제점 >

- 증명서의 용도중 재직사실 증명용이 전체의 60% 이상인바, 소득자의 재직사실은 세무서장이 확인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징수의무자가 확인한 신청서를 그대로 발급함으로써 납세자가 악용할 소지가 많음.

2. 개 선 방 향

당	초	수	정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납세완납 증명원 교부로 갈음하여 개선예정		○ 단순한 재직증명에 이용되지 않도록 신청서의 기재항목중 소속부서, 직위 재직기간을 삭제	

3. 관 계 법 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92 조 제 1 항, 제 2 항

4. 관 련 부 처

- 재 무 부

1. 관세사범에 대한 조사처리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현행 관세사범에 대한 통고처분기준이나 벌금양정금액은 '80. 4.15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91. 1. 1)이전의 특가법 해당금액에 의한 것임.

<문제점>

- '80년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율(16%)에 비하여 밀수주종품의 거래가격은 300~400% 이상 상승하였고, 특가법 개정으로 특가법 해당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현행 규정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화되었음.

2. 개 선 방 향

- 밀수 주종품의 거래가격상승율과 특가법 해당금액의 상향조정에 상응한 통고처분기준이나 벌금양정기준 설정

3. 관 계 법 령

- 관세법 제 199 조
- 관세사범에 대한 조사처리 및 벌금양정준칙

4. 관 련 부 처

- 검 찰 청

[관 세 청]

2. 임시개청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관시에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음.
- 허가수수료 금액 : 1건 당 기본료에다 1시간 초과시마다 추가요금 납부

<문제점>

- 수출입업체에 과중한 부담 초래

2. 개 선 방 향

- 동일 화주가 여러 건의 수출입신고 물품을 동시에 1건으로 임시개청 허가신청할 경우에는 1건으로 허가 및 징수처리토록 개선

3. 관 계 법 령

- 관세법 제 236 조, 동법 시행령 제 159 조, 동법 시행규칙 제 45 조
- 관련예규(관 236-3-0-1)

4. 관 련 부 처

- 없음

3. 소요량계산서에 의한 관세환급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고시품목 : 수출업체가 작성 제출한 소요량계산서를 소요량 고시와 비교
확인하여 소요량증명서에 갈음
- 비고시품목 : 관할세관장이 인정하는 성실 수출업체가 작성 제출하는
소요량 계산서를 인정

<문제점>

- 소요량 계산서 활용실적 미미함 : '90년도 200여건 발급
- 무역관리규정에 구체적 명시규정 미약

2. 개 선 방 향

- 일정 수준이상의 모든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소요량계산서
제도화

3. 관 계 법 령

- 무역관리규정 (상공부고시) 제 5-3-3 조
- 환특법시행규칙 (관세청고시) 제 4-1 조

4. 관 련 부 처

- 상공부

4. 보세공장사용 신고물품 검사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사용신고한 물품전부를 세관공무원이 검사하도록 규정

<문제점>

- 세관관리 인력부족으로 사용신고된 물품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반 수출입물품의 검사제도와는 상이함

2. 개 선 방 향

- 보세공장물품의 사용신고시 사용신고된 물품 전부를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필수검사대상과 불규칙 발취검사대상만을 검사하도록 검사대상 변경

3. 관 계 법 령

- 관세법 제 98조의 2 제 2 항
- 보세공장 운영요령 제 15 조

4. 관 련 부 처

- 재무부

5. 불성실신고자 지정방법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 40 조 제 1 항에 의거 불성실 신고자를 지정하여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편의적 통관절차를 배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정 사유 발생시마다 즉시 해당업체를 불성실 신고자로 지정하고 있음

<문제점>

- 지정 사유 발생업체마다 수시 지정하게 되므로 지정 또는 해제시점이 전부 다르게 되어 행정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음

2. 개 선 방 향

- 매월말 당월 지정사유 발생분을 일괄 지정함으로써 해제 시점을 매월말로 조정할 수 있음

3. 관 계 법 령

- 관세평가 시행세칙

4. 관 련 부 처

없음

1. 수교사회주의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수교사회주의국가 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함

<문제점>

- 수교사회주의 국가와의 인적교류 확대 및 교역증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증발급등 입국절차의 간소화 추진 필요

2. 개 선 방 향

- 수교후 일정기간(1 ~ 2 년) 경과한 사회주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15일간 무사증 입국허가(관계부처 협의 필요)

3. 관 계 법 령

- 해당없음

4. 관 련 부 처

- 안기부
- 외무부

2. 귀 휴 시 행 규 칙 개 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재소자에 대한 귀휴시행의 횟수는 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형기중 5회를 초과할 수 없음(귀휴시행규칙 제 14 조)

<문 제 점>

- 귀휴시행횟수 제한으로 학과교육과 시험응시에 지장이 있음.

2. 개 선 방 향

- 재소자 학과교육과 시험응시를 위한 경우등에 소장이 귀휴횟수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관 계 법 령

- 행형법 제 44 조 제 2, 3 항
- 귀휴시행규칙 제 14 조 (법무부령 제 283 호)

4. 관 련 부 처

- 없음

[법 무 부]

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규칙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위 규칙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비교도대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인사관리, 사기진작, 보급, 의료, 보전원호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법무부훈령 제 13 호, 1983.12.21)

<문제점>

- 관계법령인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병역법,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관련조문의 개정,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함.

2. 개 선 방 향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동규칙 관계조문 개정·정비 보완
- 기타 경비교도대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보완

3. 관 계 법 령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및 동법시행령
-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4. 관 련 부 처

- 없 음

1. 군인연금법상 장애보상금 지급기준 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군복무중 부상등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신체장애 등급(1~3급)에 따라 보수 월액의 6배~12배에 상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

<문제점>

- 신체장애 등급이 타 상이등급(예: 국가보훈상이 등급 7등급)에 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 급별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이 63년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있어 현실에 부적합.

2. 개 선 방 향

- 신체장애등급 조정
 - *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의 신체장애등급과 일치되게 조정
- 급별 장애보상금 지급기준 조정

3. 관 계 법 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38 조의 4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51 조 및 제 53 조

4. 관 련 부 처

- 경제기획원

2. 군용시설 교외이전 추진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군용시설 교외이전에 필요한 소요 자원(토지의 매수, 시설의 건설 및 이전등)을 도시소재 국유재산 매각대금등으로 충당
- 이 경우 세출이 세입을 초과시에는 별도 차입방안(도시외 지역소재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마련되어있으나 실제운영상 차입확보 곤란

<문제점>

- 소요자원 확보 곤란으로 군용시설의 교외이전 추진에 차질 초래

2. 개 선 방 향

- 군용시설 교외이전 자원 확보 방안으로 국채발행제도 신설, 교외이전 추진 활성화

* 교외이전 자원확보 방안

- ① 도시지역 소재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금 : 현행
- ② 위에 의한 세입부족시 도시이외 지역소재 국유재산 매각대금 : 현행
- ③ 군용시설 교외이전 채권 발행 수익금 : 신설

3. 관 계 법 령

-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제 3 조 내지 제 7 조
-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시행령

4. 관 련 부 처

- 경제기획원
- 재무부

3. 공 군 기 지 구 역 조 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공군기지법 시행령 제 2 조 1 항 (발표) 에 명시되어있는 공군기지구역이 현실에 맞지않게 규정
 - 일부 주요비행장 확보지역이 , 발표의 공군기지 구역으로 미 규정
 - 일부 불필요한 공군기지구역이 발표의 공군기지구역으로 규정

<문제점>

- 공군기지구역으로 미규정된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등 군사시설 보호 조치시 일부 허가 행정관서와의 마찰 및 집단민원 초래 우려

2. 개 선 방 향

- 공군기지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
 - * 불필요 기지구역 삭제 및 신설 기지구역 추가

3. 관 계 법 령

- 공군기지법 제 6 조
- 공군기지법시행령 제 2 조 1 항

4. 관 련 부 처

- 교통부
- 건설부

[병 무 청]

1. 병적기록표 관리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89 년 이전 전역자 병적기록표 관리 → 지방병무청
- '89 년 이후 전역자 병적기록표 관리 → 본청 (동원과)

※ 관리인원 : 약 640 만명

〈 문제점 〉

- 1 인 병적 3 종 관리로 인력 낭비 (마이크로필름, 병적기록표, 전산)
- 병적기록표 관리대상자원과다로 시설과다소요 (300 평)
- 장기기간관리로 부실요인 내포 (병의 경우 25 세 전역시 20 년간관리)

2. 개 선 방 향

- 유사시에 병력동원소집시 즉시 전산병적기록표 출력, 군부대 인제·가능
함으로 병적기록표는 마이크로필름 촬영후 1년 보관후 폐기

3. 관 계 법 령

- 병역법시행령 제 2 조 (병적관리)
- 군복무필자병적관리에규 제 5 조 (병적기록표 관리)

4. 관 련 부 처

- 해당없음

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재학중 일정기간 현장 실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업교육법시행령 제 8 조 제 3 항)
- 현장 실습기간중 재해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음.

공업 고등학교 학생의 재해 발생 현황 ('85 ~ '90)

연 도	계	'85	'86	'87	'88	'89	'90
발 생 건 수	182	13	15	25	31	47	52

<문제점>

- 현장실습중 재해발생시 보상처리 법적기준 미비
 - 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처리
 -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중·소업체의 현장실습 기피 등 현장 실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개 선 방 향

-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체 근로자에 준하는 재해보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

3. 관 계 법 령

- 산업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직업훈련기본법

4. 관 련 부 처

- 노동부

2. 유아교육기관 지도·감독 체제의 일원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새마을유아원의 설립·운영 및 주관부처
 - 주관부처 : 내무부
 - 설립 또는 인가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유아원의 장학지도 : 교육위원회 및 시·군교육장

<문제점>

-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이 2원화
-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 미흡

2. 개 선 방 향

- 유아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교육부로 일원화

3. 관 계 법 령

- 유아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4. 관 련 부 처

- 내무부 및 보건사회부

3.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의 법인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은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시설로서, 교육법에 의한 의학·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국민 일반에 대한 진료업무를 수행함. (6 개 병원)
-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은 예산회계 운영상으로는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에 의거 일반회계와 별도로 처리되며, 조직·인사관리 등은 국립대학교에 포함되어 운영됨.

<문제점>

- 일반행정체계에 의한 조직·인사운영에 따른 인사 및 예산운영의 경직성으로 교육연구와 대규모 사업체로서의 진료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병원의 특수성 발휘 및 효율적 병원운영 미흡

2. 개 선 방 향

-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의 법인화를 위한 근거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제정

3. 관 계 법 령

- 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 국립학교 설치령
-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4. 관 련 부 처

-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보건사회부, 총무처

4. 종합대, 단과대 구분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현 제도상 대학을 종합대학교 및 단과대학으로 구분
- 종합대학교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의 장은 “학장”으로 명칭을 구분 사용

<문제점>

- 명칭 구분에 따라 사회적 예우상 차등 대우
- 교수, 학생, 학부모의 종합대 선호의식 조장
 - 무리한 학과 신·증설 요구
 - 무리한 종합대 개편 추진으로 재정압박 등 학교운영 애로

2. 개 선 방 향

- 교육법상 대학 또는 대학교 명칭을 “대학”으로 통일
- 총장 및 학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통일

3. 관 계 법 령

- 교육법

4. 관 련 부 처

- 경제기획원, 총무처

[문 화 부]

1. 공연장 설치허가 요건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객석이 300 석 이하이거나 바닥면적이 300 m^2 이하인 공연장은 설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 문제점 >

- 소규모 공연장중 일부 공연장은 저질영상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 공연장 난립으로 대중문화시설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개 선 방 향

- 소규모 공연장에 대하여도 시설기준등의 요건을 강화하여 허가청에
등록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하여 지도·감독 및 제도업무 강화

3. 관 계 법 령

- 공연법 제 7 조(설치허가등)
- 공연법시행령 제 8 조(허가의 예외)

4. 관 련 부 처

- 없음

1. 학교간 경기대회 운영방법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각급학교 및 학생들간에 행해지고 있는 경기대회는 육상종목에 한하여 매년 4~10월중에 개최되고,
- 대회운영은 남·여별, 학년별로 진행되는데, 교내대회 규모에서부터 시·군·구, 시·도대회 규모까지 개최되고 있음

<문제점>

- 대회운영이 방만하여 소요경비(출전비, 대회운영비) 부족
 - 남·여별, 학년별 학교간 대회
 - 교내, 그룹, 시·군·구 및 시·도대회
- 모든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유도라는 본래목적 달성 미흡
 - 종목의 특수성(육상)
 - 소수의 학생만으로 승부결정

2. 개선 방향

- 경기종목의 변경
 - 다수학생의 참여가 가능한 종목(육상→협동줄다리기, 다구축구, 피구 등)
- 운영상의 개선
 - 24학급을 기준으로 24학급미만 학교와 분리하여 개최
 - 소규모 학교의 참가유도 및 사기진작 도모
- 학교체육관리지침 시달

3. 관계 법령

- 학교체육관리지침

4. 관련 부처

- 없음

2. 경기단체 법인화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현존하는 경기단체는 44개 단체로서 대한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 동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임의단체로서 대의원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운영은 대한체육회 정관을 준용함.

<문제점>

- 경기단체 총재정의 50% 내외를 회장단의 찬조금에 의존
- 임의단체 성격상 단체명의 재산취득 애로
- 독자적인 사업없이 대한체육회가 승인·주관 및 주최하는 사업에만 참여

2. 개선 방향

- 경기단체 법인화 가능단체부터 자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지침시달
 - 재정자립도 50%이상 단체부터 자율적 추진
 - 경기단체 여건상 기금조성액 10억원이상 단체
- 경기단체 법인화에 따른 관계규정 개정 및 보완

3. 관계 법령

- 체육청소년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 대한체육회 정관

4. 관련 부처

- 없음

3. 국제대회 국내개최 업무 절차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국제경기대회 국내개최시 당해 종목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에 국내개최 계획을 승인 신청함으로써
- 대한체육회에서는 동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체육청소년부에 요청하고, 체육청소년부에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요청함
- 국무총리는 국제대회유치조정에관한규정(총리훈령)에 의거 국제대회 국내개최계획을 승인함

<문제점>

- 참가대상 외국인 200인 이상 또는 2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는 국제대회유치조정에관한규정에 의거 승인을 하고 있으나,
- 그 이하의 규모로 개최되는 대회에 관해서는 별도의 처리준칙이 없어 업무추진에 혼란 초래

2. 개 선 방 향

- 국내개최 업무처리사례 및 관례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국제대회국내 개최에관한규정(체육청소년부 훈령) 제정

3. 관 계 법 령

- 국제대회의유치조정에관한규정(총리훈령)

4. 관 련 부 처

- 없음

[농 립 수 산 부]

1. 양곡소매업허가제의 신고제도 전환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현행 양곡소매업허가제
 - 허가대상지역 : 서울시, 직할시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곡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지역
 - 허가요건
 - 점포면적 : 15 m^2 이상 (단, 농림수산부장관 고시지역은 10 m^2 이상)
 - 부대시설 : 저울 (앞은뱅이저울 1 대, 자동지시저울 1 대), 간판 (1 개), 가격게시판 (1 개 이상) 등
- 대부분의 양곡소매업은 영세한 소규모 점포형태로 운영

< 문제점 >

- 양곡소매업에 대한 허가제 존치로 비현실적 행정 노정
 - 최근 쌀소비량 감소추세에 대한 대응책 미흡

2. 개 선 방 향

- 양곡소매업허가요건의 단순성을 감안, 신고제로 전환
 - ※ 단, 곡가조절용 양곡방출시에는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정부미 판매업소의 지정등 보완책 강구

3. 관 계 법 령

- 양곡관리법 제 15 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의 4

4. 관 련 부 처

- 경제기획원

2. 부실관리초지정비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초지는 사료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부자금지원등에 의거 조성하고 있으며, 초지 조정자는 성실관리가 의무화되어 있고, 초지법의 규정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형질변경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 초지는 지난 67년 이후 128천헥타를 조성하였으나 경제적인 여건변화와 축산경영의 실패등으로 초지를 매각 또는 관리를 포기하여 방치하는등의 부실관리초지가 증가추세

<문제점>

- 허가없이 초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형질변경하는 위법사예 발생
- 축산업 경영실태 또는 매각된 초지에 대하여는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성실관리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 저하

2. 개 선 방 향

- 부실관리초지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타용도의 전용을 현실화하고, 부실관리초지는 초지조성 지구고시를 해제하여 초지관리에서 제외
- 초지전용 여건을 개선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성 제고
-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개선을 위한 초지관계 법령의 개정

3. 관 계 법 령

- 초지법 및 초지법 시행령

4. 관 련 부 처

- 없음.

[농 립 수 산 부]

3. 생사료검사 수수료 면제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잠업법 제 13조 제 3항에 의거 생사료검사 1건당 항목별로 20원에서 최고 3,870 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음.

<문제점>

- 민원인(검사신청인)이 경비부담으로 수검 기피
- 미검품 생사료 유통으로 생사료 및 전직물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여 국제 경쟁력 약화
- 유관기관(식물검역소, 농산물검사소)의 검사수수료 면제와 비교할때 형평에 어긋남.

2. 개 선 방 향

- 생사료 검사수수료 면제
 - 잠업법 제 13 조 3 항 삭제
 - 생사료검사규칙 제 6 조 삭제

3. 관 계 법 령

- 잠업법
- 생사료감사규칙
- 농림수산부 고시

4. 관 련 부 처

- 없음.

4. 축산물 공판장개설지역 규제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축산물공판장은 시지역에서만 개설운용 가능

<문제점>

-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환경, 공해문제 및 관련법규의 과도한 규제로 시지역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

2. 개 선 방 향

- 축산물유통편익을 위하여 시지역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지역에도 개설

3. 관 계 법 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4. 관 련 부 처

- 없음.

[농 촌 진 흥 청]

1. 생물학적제제 동물약품의 국가검정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동물약품중 생물학적제제와 항생물질제제는 제품생산전 제조회사의 자체검정실시와 국가검정기관(가축위생연구소)검정의 이중검정 체제인바,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우수업체로 선정 고시된 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항생물질제제에 대하여는 국가검정을 면제하고 자체성적으로 대체실시토록 하고 있음.
- 생물학적제제는 제조시 고도의 기술과 현대화된 시설장비등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제조회사의 자체검정과 이를 다시 검정기관에서 일괄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기화된 품목과 급증하는 생산량으로 검정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바
- 다수제품의 검정에 따른 전문성 결여, 이중검정 업무로 인한 전문연구인력 손실과 검정비용의 낭비를 가져오고
- 획일적인 검정기관의 검정실시로 민간제조업소의 창의적인 품질관리 능력 신장을 저해하고 있음.

2. 개 선 방 향

- 제조업소의 기술 및 시설·장비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국가검정을 면제하고 자체검정으로 대체가능한 일부 품목을 선정하고, 점차적으로 전품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의 품질관리 가능 향상을 적극 유도함.

3. 관 계 법 령

- 국가검정동물약품 검정규칙

4. 관 련 부 처

- 농림수산부

1. 국유림대부료율 인하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종·묘시설, 버섯재배시설, 양어장 및 야생조수인공사육시설
대부료율 : 10/100
- 화훼, 약초, 산채 및 관상수재배 등 주요 소득작물이 대부대상 사업에
없음.

<문제점>

- 농산촌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종·묘재배 시설등을 위하여 국유림을 사
용코자할 경우 대부료부담 가중
- 화훼, 약초 등 주요소득작목이 국유림대부상에서 제외되어 농산촌 소득증
대사업 차질 초래

2. 개 선 방 향

- 종·묘시설, 버섯재배시설, 양어장, 야생조수인공사육시설사업에 대한 국유림
대부료율 인하조정
- 화훼, 약초, 산채 및 관상수 등 주요소득작목을 국유림 대부대상으로 개선
하고 대부료율도 1/100 로 규정

3. 관 계 법 령

- 산림법시행규칙 제 60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2. 수출임산물 검사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검사품목 : 51 개 품목
 - 임업연구원 검사품목 : 38 개 품목 종자류, 부산물류, 묘목류
 - 산림조합중앙회 검사품목 : 13 개 품목 버섯류, 목과류, 통조림류
- 부산물류중 떡갈잎과 명개잎의 염도를 5%를 적용하여 검사 실시
- 버섯류중 건표고의 등급을 2 등급화하여 검사 실시

<문제점>

- 수출임산물 검사시 번잡한 검사절차로 인하여 임산물의 수출 부진 초래 및 민원 야기

2. 개선 방향

-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임산물 품목에 대하여는 검사절차를 일부완화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 목과류의 개포수량 및 샘플량을 축소 조정
- 부산물중 떡갈잎과 명개잎의 염도를 완화
- 버섯류중 건표고의 등급을 다양화

3. 관계 법령

- 수출임산물의 품목지정 및 검사기준에 관한 규칙 제 3 조, 제 18 조
(농림수산부, 상공부, 공동부령)

4. 관련 부처

- 농림수산부, 상공부

3. 국유림안의 매각입목 표지절차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국유림의 입목을 매각할때 작업종별에 따른 표지구분
 - 벌채구역의 경계표지
 - 경계목의 흉고부에 백색페인트 띠로 표지
 - 근부에 ㉔자로 극인 타기
 - 택벌, 간벌의 경우
 - 매각입목의 흉고에 ㉔자로 극인 타기
 - 근부에 ㉓자로 극인 타기
 - 재벌, 모수의 경우
 - 잔존시킬 입목에 한하여 흉고부에 백색페인트 띠로 표시
 - 근부에 ㉔자로 극인 타기

<문제점>

- 택벌, 간벌 작업시 매각입목의 흉고에 ㉔자 극인을 타기하는 표지업무가 번잡하여 인력 및 시간낭비 초래

2. 개 선 방 향

- 일선기관에서 국유림매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 택벌, 간벌의 경우
매각입목의 흉고에 ㉔자 극인타기를 생략하고, 흉고부에 표지만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3. 관 계 법 령

- 산림법 시행규칙 제 72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4. 산림내에서 취사행위 제도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산림내에서 취사행위등 불을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산불예방을 위하여 규제의 필요가 높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문제점>

- 국민소득향상과 여가이용의 증가로 산에 대한 등산객수가 연평균 19%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내에서 일정한 장소구분 없이 취사행위를 함으로서 산불위험이 높고 산쓰레기가 연 14%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 개 선 방 향

- 산불예방 및 산지의 정화를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에 게 신고한후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지을수 있는 경우>

- 공공단체, 각급학교, 청소년단체등의 수련활동
- 학술연구조사
- 지정된 야영장소에서 야영
- 산악단체
- 기타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관 계 법 령

- 산림법 시행규칙 제 103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5. 조수의 인공사육 허가 및 시설기준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조수를 인공사육을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와 함께 일정기준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조수양도시에도 신고를 하여야 함.
- 공원, 관광지, 동물원등에서의 조수사육은 시장·군수에게 신고
- 인공사육대상조수(12 종) : 꿩, 원아이,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곰, 호랑이, 사자, 표범, 늑대류, 여우, 기타 인명·재산·가축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큰 맹수로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수

<문제점>

- 조수를 인공사육시 번잡한 허가절차, 인공사육조수의 양도신고 및 시설 기준준수에 따른 국민불편초래
- 인공사육조수가 제한되어 있어 인공사육기술개발에 따른 농산촌민의 농 외소득원 확보 지남

2. 개 선 방 향

- 산림청장이 정하는 조수는 향가에서 신고로 완화
- 인공사육시설 기준 및 양도신고 대폭 완화

3. 관 계 법 령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 22 조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40 조, 제 41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수 산 청]

1. 어선출입항 신고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어선 출입항시는 출입항신고 기간에 어선출입합 신고
- 출입항 신고기관
 - 통제소 및 합동신고소 : 경찰요원 및 수협요원 근무
 - 신 고 소 : 경찰요원 근무
 - 대항신고소 : 경찰서장이 위촉(이장, 어촌계장)
- 출입항신고 불이행시는 어업정지, 해기사 자격정지등 행정처분

<문제점>

- 대항신고소는 전담요원이 없으며 이장 또는 어촌계장이 무부수로 운영하므로 24시간 신고업무 수행불가 : 출어지연 또는 미신고 출항사태 발생증가
- 대항신고소 운영부실로 인한 불법어선 출입항 통제곤란, 어선 안전점검 소홀로 해난사고 발생요인

2. 개 선 방 향

- 대항신고소에 전담요원 배치
 - 해안경비를 맡고있는 군부대의 방위병을 고정배치 방안검토

3. 관 계 법 령

- 선박안전조업 규칙 제 8 조, 제 13 조

4. 관 련 부 처

- 국방부

2. 어상자 제조업 및 판매업 지정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어상자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

<문제점>

-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

2. 개 선 방 향

- 지정제도 → 신고제도
 - 어상자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완화

3. 관 계 법 령

-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 제 12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수 산 청]

3. 수산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수산제조업의 허가후 제품의 종류, 생산능력, 부분별 기술책임자등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문제점>

- 제품의 종류, 생산능력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기술책임자는 유동적이므로 변경시 마다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민원인 불편 초래

2. 개 선 방 향

- 허가제 → 신고제
 - 부분별 기술책임자 변경시에는 신고토록 완화

3. 관 계 법 령

- 수산제조의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2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4. 채포금지 구역 및 기간지정 해체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조정에 있어 섬진강 수역의 전라남도 구역내에는 4.1 - 10.31 까지 채포금지기간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동류의 경상남도 구역은 채포를 허용

<문제점>

- 채포금지 기간에 불법어업 단속등의 인력낭비와 전남도 어업허가 어민의 조업상실등으로 지역감정 유발

2. 개 선 방 향

- 전라남도 수역인 섬진강의 채포금지구역과 기간지정을 해제하여 어민생산 활동에 있어서 지역적 균형을 도모

3. 관 계 법 령

- 수산자원보호령 제 8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수 산 청]

5. 양식장 형망선 정한수의 합리적 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양식장 관리 및 양식물(피조개등)채포시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을 가급적 제한
 - 양식장 형망선의 정 한수 : 양식장 70 ha 당 1 척

<문제점>

- 피조개 대일 수출시기인 3 - 4 월에는 각어장에서 동시에 채취작업이 이루어져 양식장 형망선의 부족현상이 일어나 불법 형망선 발생

2. 개 선 방 향

- 양식장 형망선 정한수의 합리적 조정
70 ha 당 1 척 → 50 ha 당 1 척

3. 관 계 법 령

-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 20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1. 유망중소기업 발굴 지원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

<문제점>

-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동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반적 발굴 지원제도의 보완 필요
 -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 발굴 저조

2. 개 선 방 향

- 유망 소기업, 유망수출기업, 유망기술기업으로 구분, 발굴
- 발굴기관의 자체지원을 집중하고 구조조정기금등 정책자금의 연계 지원 강화

3. 관 계 법 령

- 유망중소기업 발굴 지원대책 및 요령

4. 관 련 부 처

- 재무부
- 과학기술처

[상 공 부]

2 . 창업 지원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창업지원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위탁되어 있는 반면
- 창업지원 전문기관에 대한 매월 업무운용상황보고서 징구등 사후관리는 상공부에서 수행

< 문제점 >

- 업무의 양적 팽창, 새로운 정책개발업무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기존 인력과 체계로는 효율적 대처 곤란

2. 개 선 방 향

- 창업지원기금의 집행 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전문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위탁

3.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 32 조

4. 관 련 부 처

- 경제기획원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법령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87.9 유엔 (UN) 을 중심으로 지구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 (일명 후레온) 등 특정물질의 생산 및 소비규제를 위한 국제조약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 지구환경보전법 및 인류의 건강보호의 당위성과 비가입시 특정물질 및 동 관련제품에 대한 가입국의 무역규제등을 감안시 동 국제조약가입이 불가피한 실정임.

<문제점>

- 몬트리올 의정서 비가입시는 특정물질 관련제품의 수출 불가
- 동 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특정물질의 국내수요 대비 소비량 한도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
- 반면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은 업계 자율적 추진이 극히 어려운 분야임.

2. 개 선 방 향

- 국제조약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 관계법령 제정

3. 관 계 법 령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4. 관 련 부 처

- 경제기획원, 외무부, 환경처

4. 고철유통구조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고철은 철강재의 주원자재로서 고철의 가격은 철강재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침.
- 국내 고철 발생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가격은 유통구조의 복잡등으로 인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실정임.
- 고철의 가공시설 낙후 및 야적장 부족

<문제점>

- 고철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가공처리시설의 낙후등으로 철강공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2. 개선 방향

- 고철의 유통마진 절감을 위하여 유통업체의 대형화 및 유통구조 단순화를 추진하고, 고철유통의 양성화 방안 강구
- 철강재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고철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야적장 증설방안 마련

3.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 12 조
- 관세법 제 28 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5 조, 제 36 조

4. 관련 부처

- 재무부

5. 염 관련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염전개발과 염의 수급조절에 관한 법령중 과도한 규제사항 및 비현실적인 제도 잔존

<문제점>

- 민간의 자율성 저해로 생산관계자에 대한 불편 초래

2. 개 선 방 향

- 과도한 규제사항의 폐지등 관련제도의 정비
 - 염업조합 감사 승인제 폐지
 - 염판매 수탁규정 승인제 폐지
 - 공업용 염 생산보조금 및 손실보상금 교부제 폐지등

3. 관 계 법 령

- 염관리법 제8조
- 염업조합법 제13조 및 제30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공업진흥청]

1.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 생산 유도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시책의 일환으로 “전기용품의 소비전력량 및 효율 표시제도 운영요령”을 1980.10.10 자로 제정하여
-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냉장용쇼케이스, 냉동용쇼케이스 및 전기온장고등 5 품목에 대하여 절전형 전기용품 개발을 촉진토록 운영하고 있음.

<문제점>

- 전기냉방기는 전력소모가 점차 대형화 추세에 있으며 국민소득 증대로 보급률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므로
- 에너지 소비절약 측면에서 절전형 제품의 생산·보급이 필요함.

2. 개선 방향

- 소비전력량 및 효율표시품목 확대
 - 전기용품의 소비전력량 및 효율표시제도 운영요령 개정
 - 전기냉방기 품목 추가(5 품목 → 6 품목)

3. 관계 법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 26 조의 2
- 전기용품의 소비전력량 및 효율표시제도 운영요령(공업진흥청 고시 제 80-1479 호)

4. 관련 부처

- 동력자원부

1. 가스사용신고 및 완성검사신청 일원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한 사용자가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문제점>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완성검사 신청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임에도 각각 사용신고의 처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처리의 지연 및 민원인의 불편 야기

2. 개선 방향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7일 이내에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 민원인이 별도의 완성검사 신청없이 검사 실시토록 개선

3. 관계 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 28 조제 2 항

4. 관련 부처

- 없음

2. 집단에너지공급관련 인·허가시 공공용토지의 사용허가 의제처리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열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열공급사업허가 및 열공급시설 공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열공급사업자가 열공급사업용에 쓰기 위하여 도로·교량·하수구·구거·하천·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열수송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개별허가를 각각 받아야 함.

<문 제 점>

- 열공급사업은 일종의 공공사업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개별허가를 각각 받게 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지연 등 효율적인 열공급사업 추진에 지장 초래 지장 초래

2. 개 선 방 향

- 열공급사업자가 열공급시설공사계획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공공용지의 사용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별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규정 신설 .

3. 관 계 법 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4. 관 련 부 처

- 건설부 등

3. 농사용 전기요금 부과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민부담 경감을 위해 원가의 50 %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으며,
- 농사용(병) 적용대상에 축산, 양돈, 양계를 포함하고 있음.

<문제점>

- 농사용(병) 적용대상 중에서 가축은 축산, 양돈, 양계에만 적용하고 기타 가축(오리, 꿩 등)에 대하여는 산업용요금을 적용
- 따라서 기타 가축 수용가의 상대적 불평등감 초래

2. 개 선 방 향

- 오리, 꿩 등 기타 가축사육 농가에도 농사용(병) 전기요금을 적용

3. 관 계 법 령

-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급규정

4. 관 련 부 처

- 없음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업무 민간위탁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석탄산업법 제 25 조제 3 항에 의하여 석탄 및 연탄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 다만, 시·도지사는 인력 및 전문기술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검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석탄품질검사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고, 연탄품질검사의 경우는 시·도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격월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문제점>

- 검사의 이원화에 따른 검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의 결여
- 연탄검사의 경우 시·도지사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시·군·구에 재위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품질검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사업단 검사결과와 많은 차이가 생기고, 분석시설 미비로 타기관에 시료분석을 의뢰함에 따라 검사결과가 40 일이상 소요되는 등 검사업무 처리의 지연으로 그 실효성이 결여되고 있음.
- 또한 연탄업체에서는 탄광의 합리화로 원탄의 질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평소에 자율적으로 품질을 관리한 모범업체에 대하여도 계속 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불만 팽배

2. 개 선 방 향

- 석탄 및 연탄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는 현행과 같이 시·도에서 시행
- 검사업무는 사업단으로 일원화되되, 연탄품질검사의 경우는 시·도내 단일 연료단지 또는 석탄산업법 제 2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단지로서 품질관리가 우수하고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을 갖춘 지역에 한하여는 시·도 연료공업협동조합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자율검사제도를 도입

3. 관 계 법 령

- 석탄산업법 제 25 조제 3 항 및 동법시행령 제 45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건 설 부]

1. 중기에대한 정기검사 불이행시 처벌절차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중기소유자는 매년 지정된 날자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정기검사를 받지않을 경우 최고기간 없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제점>

- 중기소유자의 경과실로 인한 벌금형 부과 민원의 대상이 됨

2. 개 선 방 향

- 정기검사 불이행시 검사최고기간 설정, 통보제도 신설

3. 관 계 법 령

- 중기관리법 제 12 조 및 제 33 조제 1 호

4. 관 련 부 처

- 없음

2. 국토이용계획 결정·변경권 지방위임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등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결정 변경권이 10만㎡까지 지방에 위임되어 있음(단, 수도권 제외)

<문제점>

- 공장용지·택지 등의 수요에 신속·원활한 대처 미흡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에 의한 자유입지규모(15만㎡)와 형평에 맞지 않음

2. 개선 방향

- 지방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공장용지·택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 결정·변경권의 시·도지사에게 대한 위임범위 확대
(현행 10만㎡ → 15만㎡)

3. 관계 법령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4. 관련 부처

- 경제기획원
- 상공부

[건 설 부]

3. 이주정착금 지급제도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공공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 (이주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 을 수립·시행하되
-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10 호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자유이주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200 ~ 300 만원 범위안에서 건물평가액의 30 % 해당액을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함.

< 문제점 >

-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이주정착금이 적을뿐 아니라 현행의 이주정착금으로는 이주정착이 불가하여 민원 유발

2. 개 선 방 향

- 이주정착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3. 관 계 법 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 27 조의 2 제 4 항

4. 관 련 부 처

- 경제기획원

4.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78.12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85.8월부터 9 차에 걸쳐 허가 구역을 지정하여 현재 전국토의 41.3 %인 41.02 ~~km~~에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음.

<문제점>

- 허가제 실시 이후 공시지가체계가 확립되고 임야매매증명제, 택지소유상한제가 도입되었으나 제도간의 연계가 안되고 있음.
- 주민의 불편을 과도하게 초래함으로써 실수요자조차 토지취득 곤란

2. 개 선 방 향

- 농지·임야매매증명과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로 인정하며 농어민의 범위를 명시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취득이 용이토록 지원하는 방안 강구

3. 관 계 법 령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4. 관 련 부 처

- 내무부, 농림수산부, 산림청 등

[건 설 부]

5.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토지형질변경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22개 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사업에 한정

< 문제점 >

- 개별법(농지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므로써 법집행의 공정성 결여

2. 개 선 방 향

-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 전용허가의 경우 등은 시행령 개정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는 국가로부터 임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할 수 없음.

3. 관 계 법 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 5 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 조

4. 관 련 부 처

- 농림수산부
- 산림청

6.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불허가 조건이 환경, 풍치, 미관훼손 등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음.
- 허가의 규모가 불명확하고 용어의 정의가 모호함.

<문제점>

- 불허가 조건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음.
- 허가의 규모나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여 허가권자가 허가시 해석상 혼선을 가져올 소지가 있음.

2. 개 선 방 향

-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
- 용어의 해석상 혼선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함.
- 불허가시 불허가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하도록 함.

3. 관 계 법 령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건설부령)

4. 관 련 부 처

- 없음

7. 건축허가 신청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건축허가 및 준공시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로 도로점용허가 등 6종에 한하여 복합민원처리

<문제점>

- 건축허가 및 준공시 일괄처리되는 사항이 적어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인하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발생

2. 개 선 방 향

- 건축허가시 일괄처리되는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6종에서 농지전용허가 등 11종을 추가하여 총 17종으로 확대함.

3. 관 계 법 령

- 건축법

4. 관 련 부 처

- 경제기획원
- 농림수산부
- 환경처

8.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유자격자 책임시공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건축물의 연면적이 주거용 661 m^2 , 기타 495 m^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고, 그 이하의 소규모주택 및 기타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할 수 있음.

<문제점>

- 소규모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위탁하므로써 안전대책의 부재 및 위법·부실시공 초래
- 소규모건축물의 하자 빈발로 민원유발

2. 개 선 방 향

- 소규모건축업 등록제를 신설하여 부실시공 및 위법건축 등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불법면허대여를 근절코자 함.

3. 관 계 법 령

- 건설업법

4. 관 련 부 처

- 없음

9. 수용재결기간 단축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기간이 4~5개월 소요됨.

<문제점>

- 수용재결이 지연됨으로써 동기간중의 지가상승분이 보상액에 반영되지
되어 보상비의 증가와 공공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생김

2. 개 선 방 향

- 수용재결기간을 2~3개월로 단축

3. 관 계 법 령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

4. 관 련 부 처

- 없음

10. 공공용지취득시 토지평가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인근토지의 1/2 이내로 평가

<문제점>

- 다수 주민의 편리를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도 다른 공공시설의 시행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 형평상실 및 새마을사업 등에서의 토지제공 기피

2. 개 선 방 향

- 미불용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새마을 사업에 제공되기전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토록 개선

3. 관 계 법 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 6 조의 2 제 2 항 제 3 호

4. 관 련 부 처

- 없음

[전 설 부]

11. 중기조종사 신상변동신고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중기조종사가 신상변동(주소변경 등)이 있을시 30 일 이내에 신상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거주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문제점>

- 신고민원의 이원화로 주민불편 초래
 - 조종사 신상변동신고 : 시·도지사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 전·출입 신고 : 읍·면·동장

2. 개 선 방 향

-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의 현지구현을 도모하고 조종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업무를 주민등록의 전·출입신고와 관련하여 읍·면·동단위에서 처리토록 개선

3. 관 계 법 령

- 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 46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1. 시설묘지등 설치허가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주된 인·허가
 - 시설묘지, 시설 화장장 및 시설납골당 설치 허가(시·군 : 사회과)
- 관련 인·허가
 - 건축허가(시·군 : 주택, 건설과)
 - 농지전용허가(시·군 : 산업, 농정과)
 - 산림훼손허가(시·군 : 녹지, 산림과)
 - 배출시설 설치허가(시·군 : 사회과)

<문제점>

- 시설묘지, 시설 화장장 및 시설납골당 관련 인·허가 창구의 다원화로 처리 기간 지연 및 민원인 불편

2. 개선 방향

- 인·허가 창구의 일원화
 - 시설묘지, 시설 화장장 및 시설납골당 설치허가 부서에서 관련부서와 일괄협의 처리

3. 관계 법령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 8 조, 동법 시행규칙 제 2 조
- 건축법 제 5 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 조

4. 관련 부처

- 건설부, 환경처, 산림청, 농수산부

2. 시체운반업 허가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시체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시·군(산업과)에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경영면허를 받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군(사회과)에 시체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함.

<문제점>

-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득한 후, 시체운반업 허가가 불허되면 기확보된 시설 및 차량 등 막대한 손해 발생

2. 개 선 방 향

- 시체운반업허가 신청시 장의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여부를 시·군(산업과)으로부터 사전 심사 검토후 시체운반업 허가 결정토록 함.

3. 관 계 법 령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 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 17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6 조

4. 관 련 부 처

- 교통부

3.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및 액화가스 사용신고 일원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 또한, 동 영업을 위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전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문제점>

- 주된 민원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의 처리부서와 관련 민원인 액화석유 가스 사용신고의 처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 야기

2. 개선 방향

- 식품영업허가 처리부서로 창구 일원화하여 일괄 처리
- ※ 주된 민원처리부서에서 관련 민원 처리부서와의 업무협조로 처리

3.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 22 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 29 조

4. 관련 부처

- 동력자원부

[보건사회부]

4. 식품위생업소의 임검지도기록부 비치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식품위생법 제 17 조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식품위생검사원을 통하여 영업소를 임검하도록 하고, 임검을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임검지도기록부에 임검결과를 기재하여 당해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 법상 의무임에도 행정처분 규정이 없으므로 임검지도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지도내용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가 불가능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음.

2. 개 선 방 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0 조〔별표 12〕식품 및 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 42 조〔별표 13〕식품위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에 식품위생업소의 임검지도기록부 비치의무를 포함시켜 행정처분토록 하여 임검일시 및 법규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써 식품위생지도 단속의 지속성과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 17 조, 동법 시행령 제 6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5. 의료기관 개설시 신고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의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의료인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에서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연간 1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문제점>

- 의료기관의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시 동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신고하고 소속의료인단체에는 알리지 않음으로써 의료인단체에서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회원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됨.

2. 개선 방향

- 의료기관의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동 사실을 일정기간내에 소속 의료인단체에 통지하도록 제도화.

3. 관계 법령

- 의료법 제 33, 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2, 24 조

4. 관련 부처

- 없음.

6. 의료업에 대한 행정처분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시 업무정지, 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문제점>

- 기 입원중인 환자의 이송 또는 소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실상 행정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발

2. 개 선 방 향

- 과징금제도를 도입, 기존의 행정처분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

3. 관 계 법 령

- 의료법 제 51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7. 약사면허 취소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약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약사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의사, 치과의원,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에 대하여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료인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면허취소처분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

<문제점>

- 약사법과 의료법상의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간 형평상실

2. 개 선 방 향

- 약사에 대하여도 의료인의 경우와 같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로 법조문을 개정하여 재량인정

3. 관 계 법 령

- 약사법 제 71 조
- 의료법 제 52 조

4. 관 련 부 처

- 없 음

8. 주소지 이동에 따른 의료보험신고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이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출·입시 읍·면·동에 전·출입신고를 한 후 의료보험조합에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 주민등록 전·출입시 의료보험조합에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규정없이 실시되고 있음.

2. 개 선 방 향

-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보험급여 및 보험료부과 징수는 주민등록표에 의거 관리되고 있어 주민등록 전출·입시 의료보험조합을 경유하여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토록 하여 의료보험사업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 피보험자의 민원소지를 예방함.

3. 관 계 법 령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7 조의 2, 시행규칙 제 3 조의 3 제 1 항
- 의료보험법 제 70 조, 시행규칙 제 3 조 및 제 4 조의 2

4. 관 련 부 처

- 내무부

9. 의료보호진료비 본인부담을 인하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본인부담을 비교

구 분		본인부담율		비 고
		'90 년 도	'91 년 도	
1 종	외 래	무 료	무 료	* 의료보험 - 외래 : 50 % - 입원 : 20 %
	입 원	//	//	
2 종	외 래	//	//	
	입원 - 대도시	40 %	30 %	
	- 기 타	20 %	20 %	
의료 부조	외래	67 %	의료보험과 동일수준	
	입원 - 대도시	50 %	40 %	
	- 기 타	40 %	30 %	

<문제점>

- 의료보호대상자중 2종 대도시 거주자와 의료부조자와 입원치료시 본인 부담율이 의료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과중

2. 개 선 방 향

- '92년까지 연차적으로 본인부담율을 의료보험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
 - '91년에 우선 10%포인트 인하조정하고 '92년부터 의료보험과 일치

3. 관 계 법 령

- 의료보호법 제 6 조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 3 조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 12 조

4. 관 련 부 처

- 경제기획원

10. 의료용 방사선장치등의 안전관리대책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방사선의 안전관리업무는 원자력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가 담당
- 의료용 방사선장치중 진단용과 일정용량 이하의 치료용의 경우 등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보건의식 수준향상 및 전국민 개보험 시행으로 의료용 방사선 이용빈도 증가

<문제점>

- 의료용 방사선장치 등의 안전관리제도 미비
 - 장비노후화로 인한 성능미달과 방사선 피폭량 과다 등으로
 - 오진 등 진료의 부적정과 암발생 등 방사선으로 인한 인체에의 피해가 우려됨.

2. 개 선 방 향

- 의료용 방사선장치 및 관제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 “의료용 방사선장치 등의 안전관리규칙” 제정

3. 관 계 법 령

- 의료법
- 원자력법

4. 관 련 부 처

- 과학기술처

[노 동 부]

1. 최저임금적용시기변경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매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여 익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적용

<문제점>

- 춘계 임금교섭시기 이전인 매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됨으로써 임금의 베이스(base-up) 효과에 따른 년 2회이상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를 둘러싸고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 발생

2. 개 선 방 향

- 최저임금 적용시기 및 심의기간을 임금교섭시기 이후로 변경
 - 최저임금 적용시기 : 매년 1.1 → 매년 9.1
 - 최저임금 심의기간 : 7.1 ~ 9.28 → 4.1 ~ 6.29

3. 관 계 법 령

- 최저임금법

4. 관 련 부 처

- 없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84 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을 정하여 사업체에 권장
('87.4 근로의욕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개정)
- 기금재원
 - 사업주가 당기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협의로 정한 금액을 출연
- 기금용도 :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생활부조금 등에 사용
- 세제지원
 - 사업주 출연금에 대하여 지정 기부금 한도내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근로자지원금에 대하여 상속세, 증여세 등 면제

<문제점>

-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행정지도로 설치·권장하고 있는 바, 사업주들이 권장사항임을 이유로 기금설치를 기피하거나, 기금을 근로복지와는 다르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의 보호 및 안정적관리운영을 위한 법적지원이 필요함.

2. 개선 방향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추진
 - 재원 : 기업의 세전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출연
 - 용도 : 수익금으로 근로자재산형성지원, 생활원조,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 운영 :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노사합의 운영
 - 사업주출연금, 기금의 증식금, 근로자지원금에 대해 세제지원

3. 관 계 법 령

-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4. 관 련 부 처

- 경제기획원
- 재무부
- 상공부

3. 산재보험사무조합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산재보험법시행령 제 42 조에 의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비용 교부금을 지급함.
- 징수비용 교부기준

보험료등의 납부실적	교 부 금 액
- 90 %이상 ~ 95 %미만	납부액의 1 %
- 95 %이상	
• 16 인미만	납부액의 5 %
• 16 ~ 30 인미만	납부액의 3 %
• 30 인이상	납부액의 1 %

<문제점>

-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5 인이상 전산업으로 확대함에 따른 보험징수 행정인력 부족
-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수납부진 예상
- 보험사무조합 운영에 따른 기초징수실비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서 사무조합 참여 기피

2. 개 선 방 향

- 30 인미만 영세사업체 사무조력시 정액보상금 지급 (시행령개정 추진중)
 - 정액보상금 : 업체당 3,000 원
 - 징수비용교부금은 현행수준 유지

3. 관 계 법 령

- 산재보험시행령 제 42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4.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30톤미만의 어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음.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산재보상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문제점>

- 30톤미만의 어선원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받지 못하여 재해발생시 재해보상을 충분히 못하고 있음.

2. 개선 방향

- 30톤 미만의 어선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계법령 개정

3. 관계 법령

- 선원법 제2조제1항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4. 관련 부처

- 교통부

1. 자동차 사용 본거지 변경등록절차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자동차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등록원부를 시치한 시·도(갑관청)에서 다른 시·도(을관청)로 변경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갑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받은 갑등록관청은
 - 등록원부에 그 뜻을 표시하고,
 - 등록원부 사본 등 관계서류를 을관청에 송부
- 송부받은 을관청은
 -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토록 통지
- 재교부 신청절차 완료 후
 - 을관청은 갑관청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 갑관청은 등록원부를 폐쇄함.

<문제점>

-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신청을
 - 원거리에 소재한 갑관청에 신청토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초래

2. 개 선 방 향

-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신청을
 - 변경된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을관청)에
 - 15일 이내 신청토록 변경등록신청절차를 개선

3. 관 계 법 령

- 자동차등록령 제 24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2. 자가용자동차 사용 신고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자가용자동차중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사용신고서에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자동차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가수송수요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 동 사용신고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난 후에 이행

<문제점>

- 자동차등록을 한 후에
 - 사용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 고의적으로 자동차등록만 하고
 - 자가용사용신고를 하지 않은채
 - 불법영업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 사용신고요건이 엄격하지 못해 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움

2. 개 선 방 향

-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 선행후 자동차등록 조치
-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 요건 강화
 - 차고지확보 의무화
 - 사업자의 경우에도 자가수송수요 증명서류 추가

3. 관 계 법 령

- 자동차운수사업법, 동법시행규칙
- 자동차등록령

4. 관 · 련 부 처

- 없음

3. 자동차정류장사업 개선명령·위반사항 처분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사정, 기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 공공복리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 당해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하여
 - 개선명령 → 개선명령 불이행시 5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점>

- 다른 유사법령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상대적으로 미약 → 실효성 적음
 - ※ 다른 유사법령 위반시 (자동차운수사업법)
 - 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 : 1,000 만원이하
 - 기타 : 300 만원 이하

2. 개 선 방 향

- 개선명령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금 상향 조정
5만원이하 → 100만원이하

3. 관 계 법 령

- 자동차정류장법 제 40 조

4. 관 련 부 처

- 법무부

4.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부과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면허 취소
- ※ 과징금부과제도 없음

<문제점>

-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업면허를 취소할 경우
 - 이용 국민이 불편하여
 - 행정처분을 하기가 어려움
-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법령위반사항의 경중을 감안하고
- 이용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 합리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기가 어려움

2. 개 선 방 향

-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제도 도입

3. 관 계 법 령

- 자동차정류장법 제 25 조

4. 관 련 부 처

- 법무부

5.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운전자 자격요건
 -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운전정밀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현 황>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엄격으로 운전자 부족 초래
 - 결행 발생 등 시민수송에 민원 야기

2. 개 선 방 향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완화
 - 21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 →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 ※ 각 시·도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완화 운전경력 결정

3. 관 계 법 령

- 자동차운수규칙 제 30 조제 1 항

4. 관 련 부 처

- 없음

6.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사업용차량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대표자에게 과징금부과 처분

<문제점>

- 사업용차량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측에 전액 처분하고,
- 위반행위자인 운전기사들에게는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 법규 위반차량 증가

2. 개 선 방 향

- 운전자 자격제 실시
 - 대 상 : 회사 및 개인택시
 - 내 용
 - 교육이수, 시험부과 (지리, 교통 및 운수관련법규, 서비스 교양)
 - 불법운행기사에 대한 자격제한 (취소 또는 정지)

3. 관 계 법 령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3 조의 4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2 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 관 련 부 처

- 없음

7. 관광호텔의 갱신등록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갱신등록과 관광호텔 등급결정을 매 3 년마다 각각 실시

<문제점>

- 등급결정 업무시
 - 갱신등록의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 이를 각각 실시함으로써
 -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고
 - 행정력 낭비 및 비능률을 초래

2. 개 선 방 향

- 갱신등록제도를 폐지하고
-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심사업무에 포함 처리

3.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 4 조제 3 항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 6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8.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전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 등록하기전에 · 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함.

<문제점>

-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규제 규정 미비
- 유사콘도미니엄업의 성행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우려

2. 개 선 방 향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법적규제 근거 마련
- 유사콘도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3.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4. 관 련 부 처

- 법무부, 보건사회부

9. 여행업의 등록, 갱신등록, 영업소 개설 신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여행업등록·갱신 및 영업소 개설변경신고 신청서류중 사무실 사용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 제출
 - 자기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문제점>

- 임대차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여
 - 정당한 계약이 체결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와
 - 가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수 없어 행정처리에 애로가 있음

2. 개선 방향

- 여행업등록 신청서류중 사무실 사용권을 확인하는 서류 간소화
 - 부동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계 법령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 2 조, 제 5 조, 제 6 조

4. 관련 부처

- 없음

[철 도 청]

1. 승차권반환 및 전화예약취소 수수료 변경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승차권 반환 수수료

열차출발전일	출 발 당 일		비 고
	출발후 30 분까지	출발 30 분 경과후	
170 원	10 %	20 %	

- 전화예약 수수료

열차출발전일	출 발 당 일		비 고
	출발후 30 분까지	출발 30 분 경과후	
-	-	10 %	

< 문제점 >

- 승차권 연중예매제 실시로 연중예매전보다 승차권 반환율 대폭 증가
(10 일전 예매시보다 반환 48 % 증가)
- 전화예약 취소율 과다 (취소율 31 %)
- 승차권 반환 및 취소증가로 인한 압표 및 부조리 증가

2. 개 선 방 향

- 승차권 반환 및 전화예약 취소수수료 인상

〈평 상 시〉

구 분	출 발 전 일	출 발 당 일		비 고
		출 발 전	출 발 후	
승 차 권 반 환	170 원	170 원	50 %	
전 화 예 약 취 소	170 원	170 원	10 %	

〈대수송기간〉 : 설날, 추석

구 분	출 발 전 일	출 발 당 일		비 고
		출 발 전	출 발 후	
승 차 권 반 환	10 %	20 %	50 %	
전 화 예 약 취 소	170 원	10 %	20 %	

3. 관 계 법 령

-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 (철도청고시)

4. 관 련 부 처

- 교통부

2. 상호 유상관리환 재산가액 결정방법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국유재산중 등기부상의 관리청과 그 재산을 사실상 점유 사용하는 관리청이 상이

구	분	필	면 적 (㎡)	비 고
타 관리청이 철도용지 점유현황		1,550	1,598,183	철도청 소유
철도청이 타 관리청 토지 점유현황		4,643	1,853,335	타기관 소유

<문제점>

- 등기부상의 관리청과 사용관리청의 상이로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 관리청간 상호 점유재산의 유상관리환의 재산가액 결정시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23 조에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 함으로써,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
- 따라서 감정수수료 차액정산 및 감정시일 소요 등의 문제점 상존

2. 개선 방향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23 조에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 2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
 - 종전 : 제 37 조 준용 (감정가액에 의한 관리환)
 - 개선 : 제 26 조 준용 (공시지가에 의한 관리환)

3. 관계 법령

-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23 조

4. 관련 부처

- 재무부

3. 운전업무 전산화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운전취급관계 지시사항 정보처리
- 동력차 승무원의 승무조건 및 지시사항 게시 전달
- 운전관계 운용 및 통제업무의 철야 수작업

<문제점>

- 지시명령, 운전정보 등의 기록 및 확인교양 숙직시간 과다
(사업전 약1시간)
- 긴급 운전명령사항의 이행 및 처리곤란
- 운전취급관계 운용 및 통제업무의 처리시간 과다, 착오발생 우려

2. 개 선 방 향

- 운전분야 별도 전용전산망 구성
 - 운전관계 지시명령의 ON- LINE 화
 - 동력차 승무원관리 및 운전지도 업무
 - 운전관계 통제업무

3. 관 계 법 령

- 전산화 완전정착후 관련 훈령 정비

4. 관 련 부 처

- 없음

[해운항만청]

1. 해상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해운업법 제 4 조 및 제 26 조 규정에 의거
 -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는
 -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고 사업을 영위토록 함.

<문제점>

- 동 사업의 운영중 교부받은 면허증이
 - 훼손되거나 상호, 주소,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개서규정이 없기 때문에
 - 관계공무원의 행정처리 곤란 및 민원인 불편 초래

2. 개선 방향

- 동 면허증 관련규정에 해상운송사업면허증 개서(재교부) 신청을 위한 근거조항의 신설로 합법적 민원 처리

3. 관계 법령

-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 등 관리요령(고시)
- 내항선박운항사업면허사무처리요령(훈령)

4. 관련 부처

- 없음

2. 면허사업 내인가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항만관련 면허사업 내인가근거규정 미비로
-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 행정의 안정성 및 능률성이 미흡함.

2. 개 선 방 향

- 면허사업 내인가제 근거규정 신설
 - 시설 등 확보기간 및 사업개시의무와
 - 내인가 조건위반시 행정처분 등 조항 신설

3. 관 계 법 령

- 항만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4. 관 련 부 처

- 없음

[해운항만청]

3. 항만운송사업 양도, 양수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항만운송사업 양도·양수시 해운항만청장의 인가 필요
- 양도·양수시 인가신청 기한에 관한 규정 미비로
- 양도·양수에 대한 정부규제 과다 및 기업의 자율성 저해

2. 개선 방향

- 양도·양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양도·양수 신고기한 명시

3. 관계 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 23 조

4. 관련 부처

- 없음

4.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따른 항만시설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항만공사시행에 따른 항만시설(부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시점이 불분명하여 각 지방청별 업무처리 상이
- * 사용료 부과시점(예)

지 방 청 별	기 준 시 점
울 산 청	• 항만공사 시행허가일 기준
동해청, 포항청	• 실시계획인가일 기준
마 산 청	• 착공일 기준

2. 개 선 방 향

- 항만공사시행허가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고시) 개정으로
-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과 관련한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시점 등 기준 시달

3. 관 계 법 령

- 항만공사시행허가에 관한 처리요령(고시)

4. 관 련 부 처

- 없음

[해운항만청]

5. 부산항 통항분리방식 채택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부산항 입구 해역은
 -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 5 조에 의한 특정해역으로
 -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한 폭주 해역

<문제점>

- 부산북외항 방파제 신설로
 - 방파제 입구 부근의 교통량 폭주에 따른
 - 선박안전운항 저해요인 상존

2. 개선 방향

- 부산항 출입항로를 신설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채택함으로써
- 선박의 안전통항 도모와
- 부산항 출입항로내에서의 선박속력을 제한하여 안전운항 확보

3. 관계 법령

-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 8 조 별표 3,4

4. 관련 부처

- 내무부, 수산청, 부산시, 경남도, 중안해난심판원

6. 선박설비 결함신고요건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선박설비결함신고요건
 - 선원 20 인미만 선박은 선원 1/2 이상
 - 기타 선박은 선원 10 인 이상이 선장의 의견서 첨부 해운관서 제출

<문제점>

- 다수의 선원이 연명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음

2. 개선 방향

- 선박결함신고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 '91 년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시 신고요건 완화

3. 관계 법령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 39 조, 제 40 조

4. 관련 부처

- 없음

[제 신 부]

1. 우편요금감액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감액대상
 - 제 1 종우편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고 동일인이 동시에 3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우편물
 - 제 1 종우편물로서 월 6천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요금후납)
 - 우편법시행령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 제기사용 우편물로서 1 회 100 통이상 발송하는 제 1 종 우편물
 - 우편법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제기를 사용하는 요금후납 우편물로서 월 300 통이상 발송하는 제 1 종우편물
- 감액범위
 -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100 분의 5

<문제점>

- 감액대상이 제 1 종우편물에만 국한되어 있음.
- 감액율의 극소로 인한 우편물의 구분효과 미흡
- 우편물이 상업광고물로 변화하는 추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

2. 개선 방향

- 감액대상의 확대
 - 현행 제 1 종우편물 → 제 2 종 · 제 4 종 인쇄물 추가
- 감액범위의 조정
 - 현행 100 분의 5 → 100 분의 15 까지

3. 관계 법령

- 우편법시행규칙 제 102 조 , 제 104 조

4. 관련 부처

- 없음

2. 국제소포 우편요금의 현금수납제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국제소포우편요금은 대부분 고액 (최고 248,100 원까지) 으로 현재 서기관 국 우체국에서는 계기 별납으로 접수하고 있으나 그 외의 우체국에서는 수많은 우표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요금인영계기의 구입비 과다)

<문제점>

- 국제소포우편요금을 우표로 구입하여 첨부하는 경우
 - 창구접수시간이 길다.
 - 소포요금확인 → 우표구입 → 우표첨부 → 확인 → 접수증 발급
 - 사용우표의 재사용 가능
 - 우표판매 겸 무 및 우표수급의 차질
 - 우표조제비 낭비

2. 개 선 방 향

- 국제소포우편요금을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관 계 법 령

- 우편법 제 20 조
- 우편법시행령 제 23 조 및 제 24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체 신 부]

3. 신규공중통신업무 개발제공시 승인제도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공중통신사업자가 법령에 정한 것외의 업무를 시험적으로 제공할 때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공중통신사업자 :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데이터통신(주), 한국이동통신(주), 한국항만전화(주), 한국여행정보(주)
 - 법령상 업무(서비스) : 전보, 가입전화·전신, 정보통신, 공중통신설비 전용 및 대여 등
- ※ 시험적제공 업무 사례 : 유선방송시험, 학습정보데이터베이스, 원격자동검침, P.C서비스, 이동무선공중전화 등

<문제점>

- 시험적제공업무(서비스)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의욕 저하

2. 개 선 방 향

- 체신부장관의 승인제 폐지(제공서비스 자율선택권 부여)

3. 관 계 법 령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 10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4. 무선국 허가권한 우체국 위임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무선국허가업무를 다음과 같이 관할하고 있음
 - 방송국 : 체신부
 - 방송국이외의 무선국 : 체신청

<문제점>

- 무선국허가창구가 대도시에만 소재하고 있어 이용자 불편
- 무선국의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
- 우체국종사자의 전파관리 인식 전무

2. 개선 방향

- 5급우체국장이상 관서에 무선국 허가권한 위임
- 위임 대상업무
 - 간이무선국의 허가
 - 신고대상무선국의 신고 처리

3. 관계 법령

- 체신관서직제
- 전파관리법시행령 제 120 조

4. 관련 부처

- 없음

5. 환급금 대출연체이자 계산방법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보험계약자는 해당계약의 해약환급금의 80%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
- 대출기간은 30 일이며, 대출이율은 연리 13%임.
- 대출후 30 일을 초과하는 연체계약에는 연체시부터 변제시까지의 기간에 19%의 연체이율 적용

<문제점>

- 가계성 소액대출인 환급금 대출의 연체이율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연체이율 적용방법개선

2. 개선 방향

- 30 일이내의 연체일수에 대하여는 대출금의 30 일분의 이자에 대하여 19%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 30 일을 초과하는 연체일수에 대하여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19%의 연체이율 적용

3. 관계 법령

- 채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 41 조 및 채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89 조 ~ 91 조

4. 관련 부처

- 없음

6. 우편대체자금운영방법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우편대체자금의 대출은 현행제도상 한국전기통신공사에만 가능토록 되어 있음.

<문제점>

- 체신부에 금고를 둔 통신공사이외의 여타 공중통신사업자의 금고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개 선 방 향

- 우편대체자금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체신부에 금고를 둔 공중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함.

3. 관 계 법 령

- 우편대체법 제 29 조의 2 , 동법시행규칙 제 50 조

4. 관 련 부 처

- 없음

총

무

처

국무총리지시 제 6 호

(720-2064)

1991. 4. 1.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91년도 행정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지시

1. 정부는 그동안 행정의 민주화와 경제·사회의 공정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년 들어 우리의 행정 환경은 대내외적인 격동의 전환기를 맞아 그 변화의 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의 각종 행정제도가 환경변화를 미처 수용하지 못한 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상태로 온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각종 법령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2. 이를 위하여 정부는,

첫째,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둘째, 교통·주택·환경·교육 등 국민 기본생활욕구의 충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셋째, 범죄를 퇴치하고 불법을 추방하는 등 법질서 확보와 사회안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넷째, 지방자치제 실시 및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금년도 제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91년도 행정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제도개선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각 부처는 국민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행정기관 상호간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개선이 완료된 과제의 법령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나. 개선된 제도의 조속한 정작을 위하여, 국민에게는 개선취지와 내용을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에게는 세부업무처리지침을 주지시켜 개선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다. 아울러, 각 부처는 이미 확정된 과제 이외에도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제도개선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총무처장관은 각 부처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개선작업을 총괄하면서 수시로 개선된 제도의 이행실태를 확인·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91년도 행정제도개선 추진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10-54), 나(01)